

월간
재정포럼

2022. September_Vol.315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9

권두칼럼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변화 | 배근호

현안분석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총요소생산성 | 조희평

특집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 장윤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고창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서명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변화 | 배근호 02

현안분석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된 도시의 중요소생산성 | 조희평 08

특집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32

| 장윤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38

| 고창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서명 외 60

※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변화



배근호
동의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 6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말이다. 정부가 내실을 다지지 않고 몸집을 키워온 공공기관을 향해 칼을 꺼내든 것이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이전 정부와는 크게 달라졌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확연하다. 핵심 키워드는 첫째, 공공기관 효율화로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재무건전성 확보로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의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 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부채와 인력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 4천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임직원 수도 28.1% 늘었고 인건비 부담도 32.3%나 증가했다.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순지원액은 2016년 67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99조 4천억원으로 47%(31조 6천억원)나 급증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계속해 증가세다. 2017년 493조 2천억원이었던 부채규모는 2018년 501조 1천억원, 2019년 524조 7천억원, 2020년 541조 2천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583조원까지 악화됐다. 이 기간 영업이익의

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익은 크게 줄고 부채는 대폭 늘어난 양상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인력은 대폭 늘어나고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공기관 정책은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였다. 일반국민은 73.8%, 전문가는 89.7%가 이처럼 응답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63.8%, 전문가의 64.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 중 55.5%는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 규모가 크다고 응답했고 전문가 중에서는 71%가 이같이 응답했다. 공공기관 평균보수가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이 61.0%, 전문가가 64.9%였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에 비해 많다는 응답도 일반국민이 64.3%, 전문가 57.7%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과반이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규모가 크고 민간보다 복리후생이 많다고 인식했다.

.....
지난 7월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73.8%, 전문가 89.7%가 가장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으로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를 꼽았다.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근살 빼기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기업인 이상 수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적자가 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공공성에 편향된 공기업 정책은 방만 경영을 부추겨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분히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채가 늘어나고 조직과 인력이 비대해진 상황이라면 다르다. 우선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올릴 방안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공급비용의 결정은 발생하는 서비스가 수익자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비용편익 분석이 용이해진다.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으로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도 구분된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때 수혜자를 구체화하고 무임승차를 배제하며 해당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의 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
 공공기관이 정부가
 할 일까지 대신하면서
 ‘정책 비용’을 떠안아
 자칫 부실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대한 공적보조 방안 등은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투입(input)을 급격히 늘리면 편익만 있을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폐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공공기관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넉넉한 예산을 쓴다면 당장은 편할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 없이 투입만 증가시키는 위기 대응 결정은 빚을 내어 일상만 편안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대신하면서 ‘정책 비용’을 떠안아 자칫 부실이 커질 수도 있는 구조다. 공공기관의 빚은 정부가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숨겨진 나랏빚’으로도 여겨진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군살을 확 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거덜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자율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의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자체 수입을 더욱 발굴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일부 무료서비스의 유료화 등 자구 노력 과제를 발굴하고 재무 건전화 목표 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히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 속도와 혁신 노력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생활 곳곳에 디지털화가 내재화되고 있으며,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요소들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디지털화에 발맞춰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동안 떨어진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각 부처도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상시 점검하여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과감히 축소 및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비효율적인 업무는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업 및 기능, 업무 재조정을 통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국민이 부담을 떠안은 채 운영되는 기관은 굳이 공공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민간에 맡겨도 될 일이다. 하지만 국민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믿고 업무를 맡기는 것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공공부문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노력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다. 

• • • • •
**공공부문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며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다.**





| 현안분석 |

■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중요소생산성
조희평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된 도시의 총요소생산성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cho@kipf.re.kr)

I. 서론

기업이 어떤 도시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해안도시에 위치한 기업이 내륙에 있는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을 수 있는데, 항구에 인접한 경우 화물 운송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자체의 생산성이 존재하며, 도시의 다양한 자연적·인공적 특성에 의해서 이러한 생산성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도시 간의 상이한 생산성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도시 간 생산성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희평(2021)에서 사용한 공간균형 모형(spatial equilibrium model)을 가계가 아닌 기업에 적용하여 도시의 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의미하며 이는 주어진 노동, 자본, 토지하에서 얼마나 많은 산출물이 생산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모형에서는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을 가정하기 때문에 균형에서는 기업이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게 0의 이윤을 가진다. 해당 가정하에서 도시의 생산성은 그 도시에 위치하는 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비용이란 도시의 높은 임금과 지대(地代; rent)를 의미한다. 즉 기업이 높은 임금과 지대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위치하는 것은 도시의 높은 생산성이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도

시의 평균적인 임금과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다.

공간균형 모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의 생산성을 도출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두 도시의 예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IT·첨단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임금, 임대료 및 토지가격은 미국의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듯 샌프란시스코의 기업들은 높은 임금 및 토지비용에 직면하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매우 높은 생산성으로 이를 상쇄하고 있다. 반면 러스트벨트(Rust Belt)에 위치한 피츠버그는 생산성이 샌프란시스코보다 뒤처지는 편이다. 하지만 피츠버그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토지비용으로 이러한 피츠버그의 낮은 생산성을 보상받고 있다. 이렇듯 도시의 생산성은 그 도시의 평균적인 임금과 가격수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균형 모형을 한국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들은 서울시와 수도권 도시 및 지방의 일부 산업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대체적으로는 중부지방 도시들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남부지방 도시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의 인구가 많을수록, 고학력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이나 인구가 한곳에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s)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도시가 해안선과 가까울수록, 경사가 완만할수록, 일조량이 적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자연적인 요인 또한 생산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도시의 임금과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도시의 생산성을 추정된 기존의 도시경제학 연구에 기반을 둔다(Rosen(1979), Roback(1982), Beeson and Eberts(1989), Gabriel and Rosenthal(2004), Albouy(2016)). 특히 Albouy(2016)는 미국의 지대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시 간 지대격차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도시의 인공적·자연적인 어메니티(특성)와 도시의 생산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 생산성 차이에 관한 여러 연구(이변송(2000), 이변송·장수명(2001), 김아영·김의준(2007), 이영성(2008), 이창근 외(2009), 박희석(2010) 등)가 존재하나 본고와 같이 공간균형 모형을 활용해 생산성을 추정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¹⁾

**본고에서는
공간균형 모형(spatial
equilibrium model)을
기업에 적용하여
도시의 생산성을
추정하였다.**

1)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산업 수준의 집합된 자료나 미시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혹은 산업별 총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대부분 제조업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 추정하는
지수는 도시의 절대적인
생산성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도시 간의 전반적인
생산성 차이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고는 여타 국내 연구와는 달리 Albouy(2016)의 공간균형 모형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2019년 한국 도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추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고는 도시의 생산성과 다양한 도시의 인공적·자연적 어메니티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는데, 도시의 인공적 특성에만 집중한 국내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기여점이다. 아울러 본고는 생산성 추정에 기반이 되는 도시 간 지대격차 추정 시 공시지가 전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토지가격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택가격 등을 통해 생산성을 추정하는 기존의 해외 선행연구와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도시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모형에서 도출된 생산성은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실제보다 과소·과대 추정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수도권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지방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도시 간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생산함수 및 시장경쟁구조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추정하는 지수는 도시의 절대적인 생산성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도시 간의 전반적인 생산성 차이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II. 이론 모형

본 장에서는 도시의 생산성 계산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 모형을 소개한다. 본 모형에서 개별 기업은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하에서 어떤 도시에 위치할지, 생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산요소를 사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먼저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X = A^i F(L, N, K) \quad \text{식 (1)}$$

X 는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가격을 가지는 교역재화(tradable goods)이다.²⁾ X 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산요소 L, N, K 는 각각 토지, 노동, 자본이다. F 는 오목함수(concave)의 형태를 가지며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한다. 즉 생산요소를 각각 1% 증가시킨다면 생산량 또한 1% 증가한다는 것이다. A^j 는 도시 j 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며 요소투입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factor-neutral).

이 모형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균형(equilibrium)에서 모든 기업은 0의 이윤을 얻게 된다. 만약 한 기업이 도시 j 에서 0보다 큰 이윤을 얻는다면 다른 기업이 도시 j 에 이전할 유인이 생기며, 반면에 0보다 작은 이윤을 얻는다면 해당 기업이 다른 도시로 이전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개별 기업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r^j, w^j, \bar{i}; A^j) = r^j L + w^j N + \bar{i} K \quad \text{식 (2)}$$

r^j 와 w^j 는 각각 토지와 노동의 도시 j 에서의 가격, 즉 임금과 지대이다. \bar{i} 는 자본 가격인 이자이며 기업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값을 가진다.³⁾ 균형에서 기업은 0의 이윤을 얻기 때문에 생산량(X)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한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생산물 X 의 단위가격과 동일한 값을 가지며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⁴⁾

$$c_x(r^j, w^j, \bar{i}; A^j) = 1 \quad \text{식 (3)}$$

실증분석을 위해 식 (3)을 로그선형화(log-linearize)하여 풀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된다.

$$\widehat{A^j} = \phi_L \widehat{r^j} + \phi_N \widehat{w^j} \quad \text{식 (4)}$$

여기서 $\widehat{x} = d \ln(x/\bar{x}) = dx/x$ 는 x^j 의 전국 평균(\bar{x})으로부터의 로그격차(log deviations)로 정의된다. 이는 도시 j 의 x 값이 전국 평균(\bar{x})보다 몇 퍼센트 높은지(낮은지)로 해석되며, x 가 전국 평균과 같을 경우 0의 값을 갖게 된다.

공간균형 모형에서
개별 기업은
완전경쟁하에서
어떤 도시에 위치할지,
생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산요소를 사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2) 반면에 주거재화와 같은 비교역재화(non-tradable goods)는 도시마다 상이한 가격을 가진다.

3) 만약 특정 도시의 자본가격이 타 도시에 비해 높다면 본고의 방법은 해당 도시의 생산성을 과소추정하게 된다.

4) 교역재화 생산물의 가격은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게 1이라고 가정한다.

**완전경쟁하에서의
기업 이윤은 모든
도시에서 0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생산성이
높다면 그만큼의 높은
생산비용, 즉 높은 지대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widehat{A}^j, \widehat{r}^j, \widehat{w}^j$ 는 도시 j 의 생산성, 지대, 임금 각각의 전국 평균으로부터의 격차(전국 평균과의 퍼센트 차이)를 의미한다. ϕ_L 와 ϕ_N 는 각각 총비용에서 토지 비용과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도시 j 의 생산성(\widehat{A}^j)은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생산성이 전국 평균인 도시와 비교하여 몇 퍼센트의 산출물(X)이 더 생산되는지를 의미한다. 식 (4)는 도시의 평균적인 토지가격과 노동가격($\widehat{r}^j, \widehat{w}^j$)이 높을수록 이러한 도시의 생산성(\widehat{A}^j)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완전경쟁하에서의 기업 이윤은 모든 도시에서 0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생산성이 높다면 그만큼의 높은 생산비용, 즉 높은 지대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도시의 생산성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식 (4)의 모수(parameters)는 ϕ_L 과 ϕ_N 이며 각각 토지비용과 노동비용이 기업의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노동비용이 전체 기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ϕ_N)은 임용빈(2020)에서 추정된 자영업 부문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인 0.793을 사용하였다. 자동으로 토지비용(ϕ_L)과 자본비용(ϕ_K)이 전체 기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07(=1-0.793)$ 이 된다. 이 중 ϕ_L 은 2015년 경제총조사에서 기업의 전체 자산 중 토지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자본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⁵⁾

$$\phi_L = (1 - \phi_N) \cdot \frac{\text{토지자산} \cdot \text{이자율}}{\text{총자산} \cdot \text{이자율} + \text{감가상각비}} \quad \text{식 (5)}$$

식 (5)는 비교역 재화(주거재화 등)를 주로 생산하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며 0.04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ϕ_L 은 0.023의 값을 가지게 된다.⁶⁾ 미국의 선행연구는 다른 방식으로 ϕ_L 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계산값과 유사한 값(0.016에서 0.027 사이)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시의 생산성은 토지가격과 임금의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widehat{A}^j = 0.023\widehat{r}^j + 0.793\widehat{w}^j \quad \text{식 (6)}$$

5)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국민대차대조표에서 계산된 비주거 부동산의 건물-토지 비율을 활용하여 일부는 토지 자산으로 산입하였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6) 해당 이자율은 2019년 예금은행 평균 기업대출금리가 3.54%(신협은 경우 4.08%)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이자율을 0.02나 0.06으로 설정할 경우 ϕ_L 은 각각 0.015와 0.029로 계산된다. 즉 이자율을 높게 설정할수록 지대가 높은 도시의 생산성이 더 높게 추정되는데, 대안적인 이자율을 사용하더라도 본고의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III. 자료와 추정방법

본 장에서는 도시의 생산성(\widehat{A}^i) 계산의 바탕이 되는 도시의 임금격차(\widehat{w}^i)와 지대격차(\widehat{r}^i)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도시’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6개), 그 외 시·군(154개)으로 정의되며 총 162개의 도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먼저 각 도시별 임금격차(\widehat{w}^i)는 2019년도 지역별 고용조사(상반기 및 하반기)에서 조사된 25세와 55세 사이의 임금근로자 샘플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량식을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임금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희평(2021)과 달리 임금격차 계산 시 근로자의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 정보를 활용한다.

$$\ln w_i^j = X_i^j \beta + \mu^j + e_i \quad \text{식 (7)}$$

X_i^j 는 근로자의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직업, 산업, 정규직 여부)이며 μ^j 는 도시고정효과이다.⁷⁾ 도시 간 평균적인 임금수준의 차이는 도시의 인구구성,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높거나 특정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정된 μ^j 는 교육수준과 연령 같은 개인의 특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시 자체의 특성이 임금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나타낸다. 이 값을 평균이 0이 되도록 표준화하면 도시의 로그임금격차인 \widehat{w}^i 가 된다.⁸⁾

다음으로 각 도시별 지대격차(\widehat{r}^i)를 구하기 위해 2019년도 전국 개별 공시지가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계량식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사용하는 공시지가는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토지를 포함하나, 추후 강건성 분석에서는 상업이나 공업 등 생산활동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ln r_i^j = Y_i^j \beta + v^j + e_i \quad \text{식 (8)}$$

Y_i^j 는 지목,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지형높이, 지형형상, 도로접면 여부이며 v^j 는 도시고정효과이다. 토지가 도로에 접할수록, 주거나 상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대체로 높으며, 이러한

도시의 임금격차는
교육수준과 연령 같은
개인의 특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시 자체의
특성이 임금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나타낸다.

7) X_i^j 는 특성변수들 각각의 고정 효과를 성별 고정효과와 교호(interaction term)하였다.

8) 해당 문단은 조희평(2021)의 내용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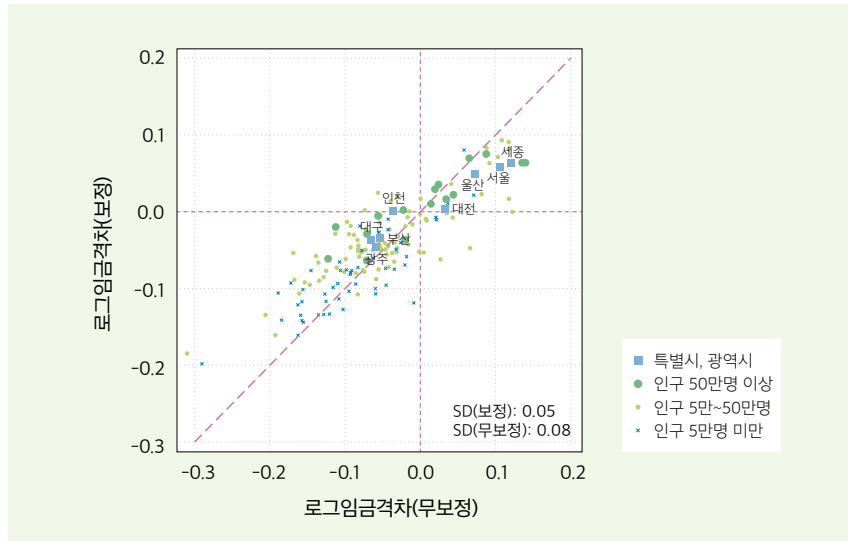
도시의 지대격차는 토지의 용도, 이용상황, 지목, 특성 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 자체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토지의 특성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토지의 용도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추정된 α_i^j 는 이러한 토지의 용도, 이용 상황, 지목, 특성 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 자체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을 평균이 0이 되도록 표준화하면 도시의 로그지대격차인 $\hat{\rho}$ 가 된다.

IV. 도시의 생산성 추정 결과

[그림 1]은 식 (7)에서 추정된 도시의 임금격차(\hat{w}^j)를 보이고 있다. 본 그래프의 x축은 개인의 특성(X_i^j)이 통제되지 않은 로그임금격차(무보정)이며, y축은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로그임금격차(보정)를 나타낸다.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도시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며, 이는 표준편차(SD)의 감소(0.08→0.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6%

[그림 1] 도시의 임금격차



주: 1. x축은 식 (7)에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도출된 로그임금격차임
2. y축은 식 (7)에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고 도출된 로그임금격차임
3. 0은 각 지수의 전국 평균을 나타냄
4. SD는 2019년도 인구를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각 지수의 표준오차임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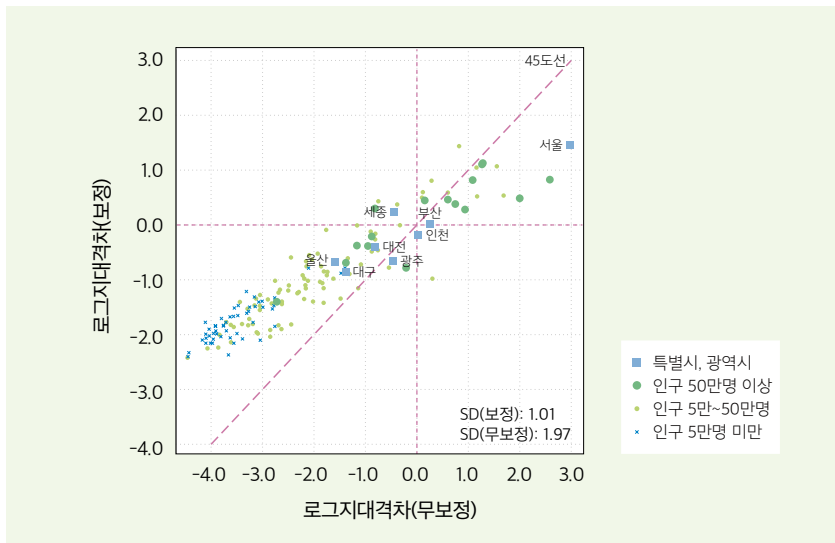
9) 구체적으로는 Y_i^j 에서 용도지역 고정효과를 기타 토지 특성별 고정효과와 교호하였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는 전국 평균보다 5.9%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w_{서울}^{\widehat{}}=0.059$). 전반적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도시들과 당진, 광양 등의 산업도시들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다. 공간균형 모형에 의하면 이러한 임금프리미엄(wage premium)은 해당 도시의 높은 생산성 혹은 낮은 거주환경의 질(조희평, 2021)을 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는 식 (8)에서 추정된 도시의 지대격차(\widehat{p})를 보여주고 있다. 본 그래프의 x축은 토지의 특성(Y_i^T)이 통제되지 않은 로그지대격차(무보정)이며, y축은 토지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로그지대격차(보정)를 나타낸다. 표준편차(S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대격차 또한 토지의 용도와 특성이 통제됐을 때 감소한다(1.97→1.01). 예를 들어 서울의 토지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298% 높지만, 토지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전국 평균보다 146%가량 더 높다($\widehat{p}_{서울}^{\widehat{}}=1.459$). 대체적으로 서울과 서울 주변 도시들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토지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간 토지가격의 차이는 도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도시들과
일부 지방 산업도시들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과
서울 주변 도시들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토지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도시의 지대격차



- 주: 1. x축은 식 (8)에서 토지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도출된 로그지대격차임
 - 2. y축은 식 (8)에서 토지의 특성을 통제하고 도출된 로그지대격차임
 - 3. 0은 각 지수의 전국 평균을 나타냄
 - 4. SD는 2019년도 인구를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각 지수의 표준오차임
- 출처: 저자 작성

**도시마다 추정된
임금격차와 지대격차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계산한 결과,
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서울과
수도권 도시 및
특정 산업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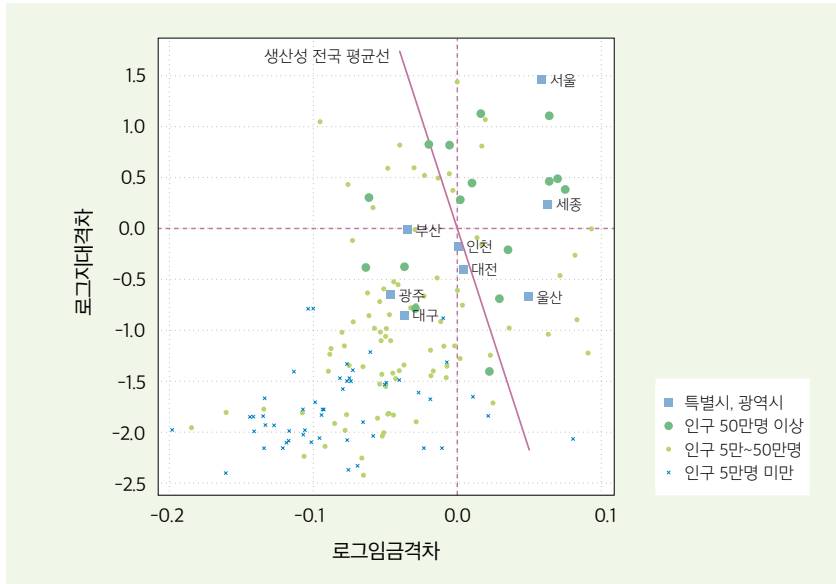
간 임금의 차이보다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간균형 모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높은 토지가격은 해당 도시의 높은 생산성 또는 높은 거주환경의 질(조희평, 2021)을 반영한다.

[그림 3]은 도시의 로그임금격차(\widehat{w}^i)와 도시의 로그지대격차(\widehat{r}^i)를 같은 그래프에 나타낸다. 먼저 그래프를 통해 도시의 토지가격이 높을수록 임금 또한 대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론모형에서 도출된 식 (6)을 활용하여 생산성(\widehat{A})이 같은 \widehat{r}^i 와 \widehat{w}^i 의 집합을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직선이 우상향할수록, 즉 지대가 증가하고 임금이 증가할수록 도시의 생산성은 높아진다. 특별히 [그림 3]의 실선은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 수준($\widehat{A}=0$)인 \widehat{r}^i 와 \widehat{w}^i 의 집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직선보다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은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생산성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더 높다($\widehat{A}>0$). 반대로 직선 좌측에 있는 도시들은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widehat{A}<0$).

도시마다 추정된 임금격차(\widehat{w}^i)와 지대격차(\widehat{r}^i) 및 식 (6)을 이용하여 생산성(\widehat{A}^i)을 계산한 결과, 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서울과 수도권 도시 및 특정 산업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높은 생산성은 수도권의 높은 임금과 토지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전국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시로 나타났다. 서울의 임금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5.9% 높고($\widehat{w}^{\text{서울}}=0.059$) 토지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146% 높다($\widehat{r}^{\text{서울}}=1.459$). 즉 서울의 기업은 높은 수준의 임금비용과 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0의 이윤조건하에서 평균적인 도시에 위치한 기업에 비해 8%만큼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widehat{A}^{\text{서울}}=0.080$). 다만 수도권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서울의 기업이 0보다 큰 이윤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서울의 실질적인 생산성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여타 수도권 도시들과 특정 산업 도시들이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도시들 중 특히 경기도 성남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등이 서울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는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은 첨단 IT기업으로 인한 집적효과가, 평택시·수원시·화성시 등의 경우 대기업 공장으로 인한 집적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지역 외의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광양시 등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도시들의 높은 평균 임금에 반영되

[그림 3] 임금격차·지대격차·생산성



주: 그래프의 직선은 도시의 생산성을 전국 평균($\hat{A}=0$)으로 만들어주는 로그임금격차(\hat{w})와 로그지대격차(\hat{r})의 집합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어 있다. 다만 산업도시들 중에서도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은 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러한 생산성 추정치가 강건한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성 추정에 기반이 되는 도시별 임금격차와 지대격차 계산 시 대안적인 분석 표본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강건성 분석으로 토지 가격격차 계산 시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는 토지만 이용하였다. 주거용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하고 상업·업무용(주상복합 포함), 공업용 및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만 포함하여 도시별 토지가격격차를 계산한 것이다.¹⁰⁾ 이러한 생산과 관련된 토지만을 활용하여 지대격차를 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시별 생산성을 추정하였지만, 전체 토지를 활용한 앞선 추정값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그림 4]에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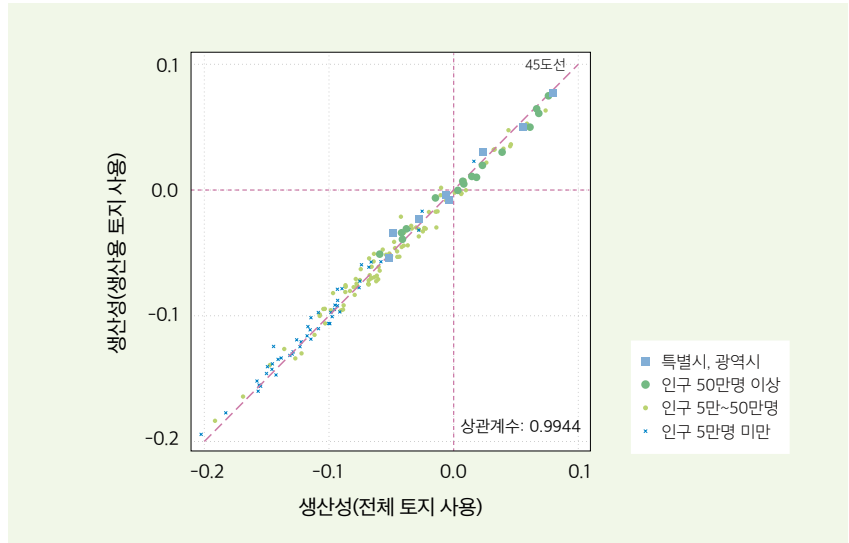
두 번째 강건성 분석으로 토지 공시지가 자료 대신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계산하였다. 실거래가의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가격차 계산 시 제외되며, 거래 빈도수가 낮은 일부 도시의 경우 큰 측정오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선 분석에서는 토지 공시지가 자료를 활

도시 생산성 추정치의 강건성 분석을 위해 생산과 관련된 토지만을 활용하여 지대격차를 구하고 도시별 생산성을 추정하였지만, 전체 토지를 활용한 앞선 추정값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 구체적으로 상업용, 업무용, 상업나지, 상업기타, 주상용, 주상복합용, 주상기타, 주상나지, 공업기타, 공업나지, 공업용, 전, 과수원, 전기타, 전창고, 전축사, 담, 담기타, 담창고, 담축사를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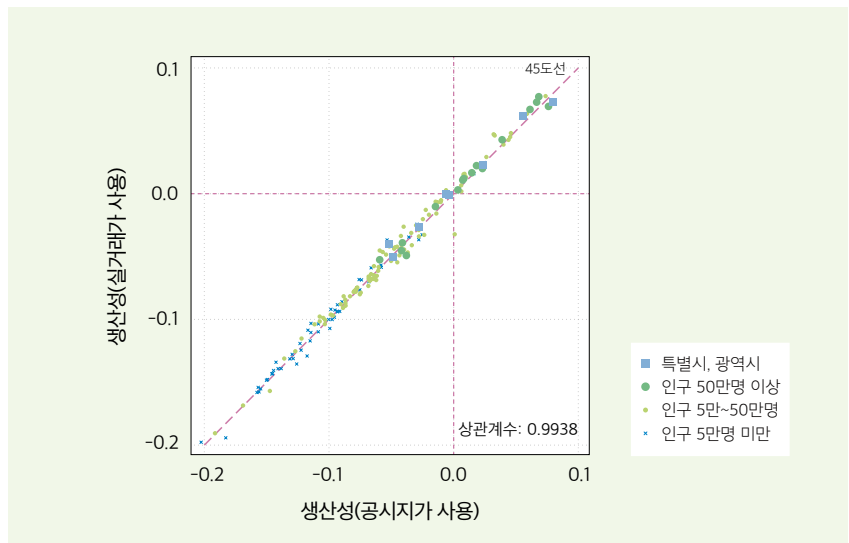
토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이용하여
계산된 생산성 수치를
살펴보면,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두 값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생산활동 관련 토지에 기반을 둔 도시의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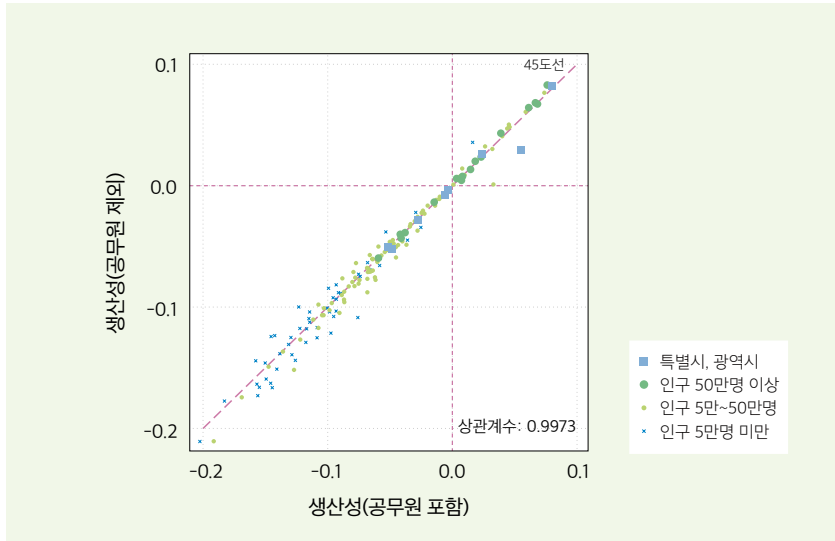
주: x축은 전체 토지를 사용하여 추정된 생산성인 데 반해 y축은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토지만을 사용하여 도출된 생산성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 토지 실거래가에 기반을 둔 도시의 생산성



주: x축은 토지가격격차 추정 시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도출된 생산성인 데 반해 y축은 가격격차 추정 시 실거래가를 사용하여 도출된 생산성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공무원을 제외한 도시의 생산성



주: x축은 임금격차 추정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여 도출된 생산성인 반면, y축은 임금격차 추정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여 도출된 생산성임

출처: 저자 작성

용하였다. 하지만 토지 실거래가 자료는 공시지가보다 토지의 시장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그림 5]는 각각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이용하여 계산된 생산성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두 값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0.99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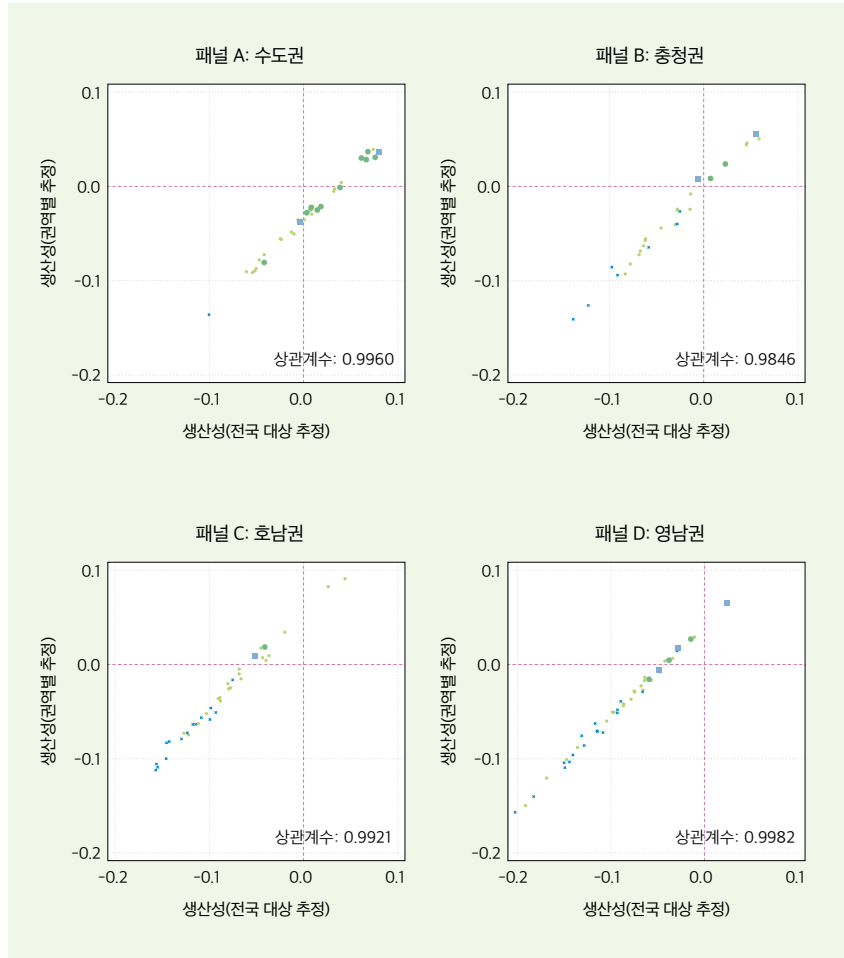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여 도시의 임금격차를 추정하고 생산성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의 위치 선정은 도시의 평균적인 생산성, 임금 및 지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공간균형 모형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그림 6]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는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밀집한 세종시나 과천시 생산성이 이전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체적인 생산성 추정값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7]은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계산한 생산성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계산의 기본이 되는 도시별 임금격차(\hat{w}^i)와 지대격차(\hat{r}^i)를 권역별로 계산함으로써 도시 특성이 임금과 지대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생산성 추정값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도시별 임금격차와
지대격차를 권역별로
계산한 결과, 권역별
생산성 격차는 앞서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추정한 생산성 격차와
상당히 유사함을 보인다.

[그림 7] 권역별로 추정한 도시의 생산성



주: x축은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임금격차와 지대격차를 추정하여 계산한 생산성인 반면에 y축은 권역별로 임금 격차와 지대격차를 추정하여 계산한 생산성임

출처: 저자 작성

미치는 영향이 권역별로 상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림 7]에서는 권역별로 추정한 생산성 격차와 앞서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추정한 생산성 격차가 상당히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¹¹⁾ 다만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생산성 계산을 위한 모수(ϕ_L, ϕ_N)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보다 더 심도 있는 강건성 분석을 위해서는 모수 또한 권역별 혹은 도시별로 상이하게 설정하여 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 권역별 생산성(y축) 계산 시 권역별 평균이 0이 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y절편은 권역별로 다르다.

V. 도시의 생산성과 어메니티

제IV장에서는 도시 간의 현저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함을 보였다. 그렇다면 도시의 어떠한 어메니티(amenity)로 인해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여기서 어메니티란 도시의 생산성이나 거주환경의 질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의 특성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도시의 생산성(\hat{A})과 어메니티(Z_1, \dots, Z_K)와의 관계성을 보이기 위해 다음의 선형 계량식을 추정하였다.

$$A^j = \sum_k Z_k^j \pi_k + \epsilon^j \quad \text{식 (9)}$$

어메니티 Z_k 는 크게 인공 어메니티(artificial amenity)와 자연 어메니티(natural amenity)로 나눌 수 있으며, Albouy(2016)에서 사용한 어메니티 변수와 대동소이하다. 먼저 인공 어메니티 변수로는 도시의 인구와 대졸자 비율을 사용하는데, 해당 변수들은 어메니티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공 어메니티를 반영하고 있는 대리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의 인구 규모는 경제 활동이 한곳에 모임으로써 발생하는 집적효과(agglomeration)와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대졸자 비율 변수는 도시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며 이 역시 지식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적효과와 관련이 있다.

자연 어메니티 변수의 경우 해안선과의 거리, 지형의 경사도, 일조율, 냉방도일, 난방도일을 사용하였다. 모든 자연 어메니티 변수는 GIS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동별 평균을 먼저 구하고 이를 동별 인구로 가중하여 시군별 평균을 구하였다. 해안선과의 거리와 경사도 자료는 각각 국토정보원의 연속수치지형도와 수치표고모형을 사용하였다. 해안선과의 거리의 경우 법정동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선과의 거리를, 경사도의 경우 격자(90m)별로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냉방도일, 난방도일, 일조율의 경우 기상청의 2019~2020년 기상관측소별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접한 관측소들의 가중평균값을 각각의 법정동에 부여하였다.¹²⁾ 일조율은 연도별로 총 일조시간을 가조시간(햇빛이 비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냉방도일과 난방

본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도시 간의 현저한 생산성 격차가 도시의 어떠한 어메니티(특성)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12) 구체적으로 법정동 중심점으로 부터 30km 이내에 있는 기상관측소(ASOS 및 AWS)를 대상으로 법정동 중심점과 기상관측소와의 직선거리 제곱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inverse distance weighting) 하였다.

횡단면 회귀분석에는
 여러 계량문제가
 상존하여,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생산성과
 어메니티와의 관계는
 온전한 인과관계가 아닌
 인과성을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는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일은 각각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나타내며, 일별 평균기온과 기준온도와의 차이의 연도별 누적합을 통해 계산된다.¹³⁾

다만 이와 같은 횡단면적 추정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계량문제가 상존한다. 먼저 독립변수인 어메니티들과의 상관관계가 높음에서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도시는 주로 여름이 더운 분지 지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와 냉방도일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생산성이 반대로 어메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 등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 높은 도시로 인구가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추정상의 편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어메니티가 추정에서 누락될 경우 발생하는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생산성과 어메니티와의 관계를 온전한 인과관계가 아닌 인과성을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는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은 도시의 생산성과 어메니티 간의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1)열은 인공 어메니티만을 어메니티 변수의 집합인 Z 에 포함하여 식 (9)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도시의 인구가 많을수록, 대졸자 비율이 높을수록 도시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두 인공 어메니티 변수만으로도 도시 간 생산성 차이의 54%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2)열은 자연 어메니티와 생산성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고의 자연 어메니티 변수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는 지방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시의 위도 또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¹⁴⁾ 추정결과 해안선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경사가 완만할수록, 여름이 덥고 겨울이 따뜻할수록, 일조율이 낮을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도시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자연 어메니티 변수만으로도 도시별 생산성 차이의 58%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열과 (2)열은 각각 인공 어메니티와 자연 어메니티 변수만을 회귀분석에 사용했기 때문에 누락 변수편의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표 1>의 (3)열은 본고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으로 인공 어메니티와 자연 어메니티를 어메니티의 집합인 Z 에 모두 포함하여 식 (9)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3)열의 추정결과는 (4)열에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고정효과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거나 (5)열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고정효과를 포함하더

13)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의 기준온도는 각각 24°C와 18°C이다.

14) 도시의 위도를 통제하지 않아도 추정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 도시의 생산성과 어메니티

종속변수: 생산성	(1)	(2)	(3)	(4)	(5)
로그인구	0.014*** (0.005)		0.012*** (0.005)	0.009** (0.004)	0.015*** (0.005)
대졸자 비율	0.246*** (0.066)		0.179*** (0.061)	0.146** (0.058)	0.135** (0.058)
해안선과의 거리 (10km)		-0.004* (0.003)	-0.005*** (0.002)	-0.003 (0.002)	-0.002 (0.002)
경사도 (수직거리/수평거리)		-0.292** (0.113)	-0.187* (0.103)	-0.205 (0.133)	-0.185 (0.141)
더운 여름 (냉방도일/1000)		0.469 (0.392)	-0.093 (0.304)	-0.173 (0.342)	-0.228 (0.348)
추운 겨울 (난방도일/1000)		-0.091* (0.048)	-0.017 (0.040)	-0.063 (0.042)	-0.066 (0.042)
일조율 (일조시간/가조시간)		-0.375 (0.256)	-0.305* (0.174)	-0.372 (0.230)	-0.315 (0.223)
위도		0.054*** (0.013)	0.025*** (0.010)	0.004 (0.013)	0.005 (0.013)
상수항	-0.284*** (0.049)	-1.555*** (0.287)	-0.904*** (0.223)	0.052 (0.454)	-0.048 (0.449)
R ²	0.54	0.58	0.71	0.77	0.77
시군 개수	162	162	162	162	162
권역 고정효과				Y	Y
특·광역시 고정효과					Y

- 주: 1.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2. 2019년 도시 인구를 가중치로 사용함
 3. (3)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4. *** p<0.01, ** p<0.05, * p<0.1 유의수준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라도 대체적으로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3)열에서 확인된 도시의 위도와 생산성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4)열에서 권역 고정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권역별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먼저 (3)열에서 인공 어메니티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1)열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시의 인구 및 대졸자 비율은 도시의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 인구가 10% 증가할 때 생산성이 0.12%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집적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인접한 기업 간의 운송비용 절약 및 지식 공유 확대, 두터운 인력풀을 통한 기업과

권역별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평균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7개의
어메니티 변수 및
위도 변수만으로도
도시 간 생산성 격차의
7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간 매칭기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대졸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성은 0.18%p 증가하는 추정 결과 또한 이러한 집적효과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고속련 인력은 지식의 확산(knowledge spillovers)을 통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도시의 전체적인 생산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3)열에서 나타난 자연 어메니티와 생산성과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2)열과 유사하였으나 추정계수의 크기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0km 가까워질 때마다 생산성이 0.0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물류비용 절약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의 경사도가 1%p 감소할 때 생산성이 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공장 부설 시 산지보다는 평지가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나타내는 냉방도일과 난방도일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가 추정되었으며, 도시의 규모를 통제한 후 추정계수의 크기가 감소하였다.¹⁵⁾ 흥미로운 점은 평균적인 기온 및 여타 어메니티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일조율과 생산성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는 것이다.¹⁶⁾ 물론 이러한 기상변수와 생산성과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누락변수 편이나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특히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인공 어메니티, 자연 어메니티 및 위도를 모두 포함한 (3)열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은 0.71로 나타났다. 7개의 어메니티 변수 및 위도 변수만으로도 도시 간 생산성 격차의 71%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어메니티 변수는 생산성 격차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을까? 이는 R^2 을 분해하는 샤플리 분해(shapley decomposi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어메니티 변수 Z_k 의 샤플리 값(shapley value)은 Z_k 가 포함되었을 때의 R^2 과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R^2 의 차이의 가능한 모든 변수 조합의 가중평균이며, 이러한 개별 변수의 샤플리 값의 합은 전체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표 2>는 <표 1>의 (3)열에 기초하여 각각의 도시 어메니티 변수의 샤플리 값, 즉 각각의 어메니티 변수가 생산성 격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두 가지 인공 어메니티 변수인 인구와 대졸자 비율은 각각 0.173과 0.184의

15)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의 상관 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냉방도일과 난방도일 중 하나의 변수를 제외하여도 추정계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16)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었지만 추후 샤플리 분해 분석에서는 도시 간 일조율의 차이가 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도시의 생산성 결정 요인 분석

구분	샤플리 값
로그인구	0.173
대졸자 비율	0.184
해안선과의 거리	0.037
경사도	0.066
더운 여름	0.038
추운 겨울	0.043
일조율	0.026
위도	0.139
R^2	0.706

주: <표 1>의 (3)열을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샤플리 값을 구하였음
출처: 저자 작성

샤플리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 어메니티는 자연 어메니티와 위도를 통제된 상황에서 전체 도시의 생산성 격차의 약 36%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자연 어메니티 변수의 경우 모두 0.05 내외의 샤플리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사도 변수가 0.066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연 어메니티 샤플리 값의 총합은 0.21인데, 이는 자연 어메니티 변수가 전체 도시의 생산성 격차의 약 2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위도 혹은 권역별 차이는 도시 간 생산성 격차의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9%는 본고에서 활용한 도시 특성 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생산성 격차이다.

본 장의 결과를 종합하면 도시의 생산성은 도시 규모가 크고 고학력 인구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집적효과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해안과 가까울수록, 경사도가 완만할수록, 일조량이 낮을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에서 사용한 도시 및 자연 어메니티 변수만으로도 70%가 넘는 도시 간 생산성 격차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인공 어메니티뿐만 아니라 자연 어메니티 또한 생산성 격차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생산성과 어메니티와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횡단면 회귀분석은 여러 추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생산성은
도시 규모가 크고
고학력 인구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집적효과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해안과 가까울수록,
경사도가 완만할수록,
일조량이 낮을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의 생산성이 낮을수록
인구 대비 산업·중소기업
관련 재정 지출이
오히려 증가한다.
이와 같은 도시 간의
차등적인 재정지출은
기업의 입지 선정이나
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일정한 왜곡을 야기하여
불가피하게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VI.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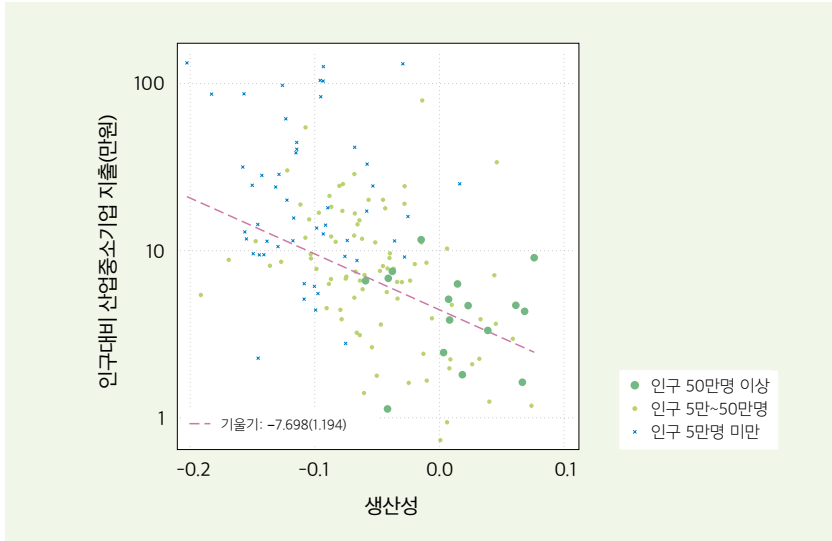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도시의 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러한 생산성과 도시의 어메니티와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기업은 도시의 임금 및 토지 비용과 도시의 생산성 간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데,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0의 이윤을 얻기 때문에 도시의 임금과 가격자료만으로 그 도시의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다. 도시의 높은 임금수준과 토지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비용은 도시의 높은 생산성으로 상쇄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의 생산성이 낮은 경우 기업은 도시의 낮은 임금수준과 토지가격으로 보상받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 아래에서 2019년도 도시의 생산성을 추정한 결과, 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 및 일부 지방 산업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중부지방 도시들의 생산성이 남부지방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적효과를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해안과 가깝고 경사도가 낮으며 일조량이 적은 도시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론에서 강조했듯이 본고에서 추정한 도시의 생산성 지수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첫 번째로 본 모형에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생산성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도시 간 산업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생산함수나 시장 경쟁 정도의 이질성이 클 경우 본고의 추정치와 실제 생산성 간에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수의 설정방법이나 분석자료, 계량추정방법 등에 따라 생산성 수치는 일정 부분 변동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추정한 생산성 지수는 도시 생산성의 절대적인 수준이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8]은 2019년 기초자치단체의 생산성과 산업·중소기업 관련 세출과는 강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의 생산성이 낮을수록 인구 대비 산업·중소기업 관련 재정 지출이 오히려 많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 간의 차등적인 재정지출은 기업의 입지 선정이나 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일정한 왜


[그림 8] 2019년 기초자치단체별 산업·중소기업 지출과 생산성



- 주: 1. x축은 본고의 생산성 지수임
 2. y축은 2019년 기초자치단체별 산업·중소기업 세출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임
 3.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는 위 그래프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저자 작성

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생산성이 낮은 도시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도시의 경제활동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Glaeser, 2008). 다만 이러한 재정지출이 집적효과를 가져오거나 외부효과를 내재화(internalize)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했다면 경제적 비효율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입안자는 먼저 도시 간에 근본적인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를 결정하는데 있어 집적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의 자연적인 특성 또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지역 간 차등적인 재정지출이 실제 낙후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엄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효율비용(efficiency costs)을 최소화하면서도 형평성 이득(efficiency gains)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 간 차등적인 재정지출이 실제 낙후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엄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효율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형평성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아영·김의준, 「수도권 및 인접지역의 제조업 생산성 비교 분석」, 『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2007, pp. 53~83.
- 박희석, 「우리나라 주요 시·도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4호, 서울연구원, 2010, pp. 1~13.
- 이변송, 「수도권 시, 군, 구의 제조업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제48권 제4호, 2000, pp. 291~322.
- 이변송·장수명, 「제조업체의 도시별 생산성 차이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9권 제3호, 2001, pp. 165~188.
- 이영성,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총요소생산성과 결정요인」, 『국토연구』, 제58권, 국토연구원, 2008, pp. 39~53.
- 이창근·김의준·최명섭, 「우리나라 지역의 총요소생산성과 결정요인 분석: DEA와 2SLS를 이용하여」, 『지역연구』, 제25권 제3호, 2009, pp. 25~43.
- 임용빈,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분석」, 『노동리뷰』 통권 제186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pp. 47~62.
- 조희평,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 8~25.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 Albouy, D., “What are cities worth? Land rents, local productivity, and the total value of ameni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8(3), 2016, pp. 477~487.
- Beeson, Patricia E., and Randall W. Eberts, “Identifying Productivity and Amenity Effects in Interurban Wage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 1989, pp. 443~452.

Gabriel, Stuart A., and Stuart S. Rosenthal, “Quality of the Business Environment versus Quality of Life: Do Firms and Households Like the Same Cit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 2004, pp. 548~444.

Glaeser, E. L., *Cities, agglomeration, and spatial equilibrium*,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Roback, Jennifer, “Wages, Rents,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 1982, pp. 1257-1278.

Rosen, Sherwin, “Wages-based Indexes of Urban Quality of Life,” in P. Mieszkowski and M. Straszheim(eds), *Current Issues in Urban Economics*,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http://nsdi.go.kr>)





2023년 예산안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장윤정·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장윤정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I. 서론

2020년 3월 이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의 긴장감에서 벗어나니 숨 돌릴 틈도 없이 ‘퍼펙트 스톱’, ‘3高 위기’ 등 경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 눈이 띈다. 실제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둔화 우려,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공존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외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증첩되어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의 성격과 달리 각종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까다로운 정책 환경이다.

이렇듯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재정건전성이 보다 중요해진다. 그동안 우리의 위기극복 역사가 증명하듯 대외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튼튼한 재정은 늘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 덕에 우리는 위기 이후 오히

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오랜 기간 30%대를 유지해오던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인 1,0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으로부터 찬사를 받던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우려 요인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번엔 위기의 모습도 다르지만 시기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채 끝나기 전에 물가와 경기둔화가 서민들의 삶을 연거푸 옥죄고 있다. 정부는 탄약고를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또다시 서민들의 삶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내년 예산안은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편성한 결과이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이다.

먼저, 그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재정건전성 회복은 재정이 다시금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돌려놓는 것과 함께 대외 신인도

회복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신뢰 회복을 통해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절감했다. 이를 위해 통상의 두 배 수준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흑자’, ‘적자’는 중세 유럽 교회에서 이익이 나면 검은 잉크로 장부를 기록하고, 손실이 날 때는 잉크값을 아끼기 위해 동물의 피를 이용해 붉은색으로 장부를 기록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 재정도 그간 빠르게 확대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등 각종 지출을 줄였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삶 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것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못지않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이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복지 지출을 크게 확대하였다.

II. 주요 내용

1. 2023년 예산안의 모습과 의미

2023년 예산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건전재정으로의 전환과 ②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라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두 과녁을 동시에 겨냥했다. 그러다 보니 한쪽 면을 강조할수록 다른 측면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가 쉽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세부내용 설명을 통해 그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예년의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5.2% 증가에 그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심지어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도 이후 처음으로 전년(2022년 총 680조원)에 비해 감소하게 되며 그 감소 폭은 6%(약 41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결과,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Delta 4.4\%$ 에서 $\Delta 2.6\%$ 로 $+1.8\%p$, $\Delta 2.5\%$ 에서 $\Delta 0.6\%$ 로 $+1.9\%p$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아직 입법 전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리재정수지가 $\Delta 3.0\%$ 를 넘지 않도록 편성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19년 37.6% → '22년 50.0%)가 반전되어 49.8%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게 된다.

다만 올해에 비해 5.2% 증가하면서 마련한 31조원의 재정여력 중 법정 지방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의 실제 가용재원은 9조원 증가에 그친다. 이에 반해 복지 지출, 인프라 투자 대응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소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당장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질없이 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 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출신수범 등을 통해 통상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 강화 등에 재투자했다. 특히 복지지출의 세부내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삶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복지 분야 증가율은 4.1%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보건 지출을 제외하면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5.6%로 전년(5.4%)에 비해 높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무려 11.7%가 증가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2%와 정부의 가용재원 15%에 비하면, 어려운 분들의 삶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 수 있다.

2. 중점 투자

2023년 예산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현재 삶을 보호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① 첫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② 둘째,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③ 셋째,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세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생활물가 안정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하였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보호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를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총 2조 4천억원 확대하였다. 복지지출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 그간 우리는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곧 생계 위협까지 이어진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따라서 최근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인 4만 8천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 금액을 확대하였다.

고용안전망 보강에도 힘썼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하여 총 27만 8천명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여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근로환경 취약업종 7천 곳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청소원, 경비원 등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한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소득·돌봄·교통 등 장애인 삶의 전 영역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월 4만원 → 6만원, 50%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8시간) 보장을 위해 기존 월 최대 125시간에서 154시간까지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원에서 경증은 5만원, 중증은 10만원씩 인상하여 35~90만원으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비용 월 5만원,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신규 지원, 저상버스 2천대 추가 등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약 6만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까지 용자되는 긴급저리용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또한 반지하·쪽방 등 취약 거주지 주거자의 주거 상향을 위해 민간임대료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보완했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의 소득,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청소년한부모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상향하여 총 3만 8천명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청년층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주거·교육·자산형성을 패키지 지원한다. 먼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5만 4천호를 공급한다. 또한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을 2만 8천명에서 3만 6천명으로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대학생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5만 5천명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인원을 7만명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군장병에게는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7.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더해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비율을 상향하여 전역 시 최대 1,2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품목 가격안정과 필수 생계비를 지원한다. 우선 밀, 대중성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 비축을 확대하여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다. 또한, 서민층의 필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연 12만 7천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였다.

나.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R&D 고도화, 디지털 혁신, 산업·기업 역동성 제고,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였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문 인력 약 1만명 추가 양성,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을 투자하며,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로운 일감 창출 및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확보·경제안보에 긴요한 모빌리티, 우주,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과 난치병, 로봇, 미래에너지 등 미개척 도전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총 4조원에서 4조 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TIPS 등 사업성과가 높은 민간연계 R&D를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반 데이터분석 강화 등을 통해 과학적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주도형 창업지원(TIPS) 지원 대상을 1,100개에서 1,60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수출·물류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에 총 3조 6천억원을 투자한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편의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교통혁신을 위해 민간자본과 연계하여 건설 중인 수도권 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검토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 및 글로벌 진출 거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민안전 보호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 일류 보훈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홍수·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소 설치 지원과 함께 스마트 예보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 2대 신규 도입,

노후헬기 6대 교체 소요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약 4,5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는 등 튼튼한 국방, 일류 보훈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경제안보 역량 강화 및 전략적 ODA에 투자한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기존 대비 두 배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데 총 3조 1천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글로벌 보건·백신, 첨단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전년 대비 14% 이상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다.

III. 맺음말

내년 예산안은 ‘서민보호와 건전재정’이라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지니고 편성했다. 두 가지 목표 모두 어렵다고 피해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기존의 상식을 다시 짚어가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선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타를 돌리는 첫 예산안이다. 한편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층의 삶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무턱대고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수행한 이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이로써 지출 구조조정이 재원마련 수단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지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원이 축소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매해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 했다.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1.7% 인상에 그쳤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함께 달성한 예산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¹⁾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개요

정부는 2022년 8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하였다.²⁾ 2023년 예산안의 대표 기조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며, 새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서 국정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년 예산안의 의미와 기조로는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되었다. 첫째,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

조의 전환이다. 예산안에서는 그간의 정부 주도의 확장재정에서 탈피하여 민간·시장주도의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다. 부모급여, 병용급 인상,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재원을 집중하여 배분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출 재구조화이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필

1) 원고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오종현, 장우현, 전병목, 정다운, 홍용기 박사님 및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평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본고에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계획”)은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기획재정부, 2022a)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2022b)을 의미한다.

[그림 1] 2023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

3대 투자 중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01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31.6조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26.6조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5.5조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12.1조원	
농·산·어촌 등 지역균형발전	8.0조원	
저출산 대응	7.4조원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02	
반도체 등 전략산업육성	3.7조원	
R&D 고도화	6.0조원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	8.9조원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	5.6조원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6조원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03	
과학기술 강군 육성	57.1조원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	4.5조원	
일류 보훈체계 구축	6.2조원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4.5조원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7.3조원	

자료: 기획재정부(2022d), p. 1.

수 재정소요 충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집행률 점검 방식을 벗어나 민간 역량의 활용 및 공공부문 효율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출 재구조화에 접근한다는 내용이다.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로는 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②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③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가 제시되었다.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 등은 과거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속성이 있으며, ‘민간주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2023년 예산안 기초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표 1> 최근 정부 예산안의 투자 중점 분야 변화 추이

2021	2022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출처: 기획재정부(2020a), (2021a), (2022a)를 참고하여 정리

건전재정 기초 확립, ② 우리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한 필요한 재정 역할의 적극 수행 ③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혁,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 강력한 재정 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초 확립 뒷받침을 제시하였다.³⁾

3) 본고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계획”, “중기재정계획”을 동일한 의미로 혼용한다.

건전재정 확립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의 안정화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개선이, 재정 역할의 적극적인 수행 측면에서는 국정과제 뒷받침과 더불어 지출 재구조화로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생지원 및 저출산·고령화, 생산성·성장잠재력 하락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재정혁신 과제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대표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출의 정상화, 보조사업의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관리가 지출 구조조정 사례로 언급되었다. 민간투자의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공공기관 자산 정비 등의 재정관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 또한 재정혁신 과제로 제시되었다.

2023년 예산안 편성 기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의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긴급한

대응 국면은 서서히 종료되어 가는 상황이며, 각국은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기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채무를 안정화하는 재정 운용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에 따르면 IMF는 2022년 4월 Fiscal Monitor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며, 국가채무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2022년 6월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OECD 재정수지는 GDP의 -7.4%, -5.0%, -3.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 보고서는 향후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정프레임워크를 통한 공공지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탄소중립 전환 등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 또한 비중 있게 다룬 것이 특징이다.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국제 상황에 더해 급격한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고령화)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또한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 추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기조 전환은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대응 등 잠재적으로 정부 지출의 역할이 요구되는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은 방향 전환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역할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수

<표 2>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 변화

2020~2024	2021~2025	2022~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용적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 총량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민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 우리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은 적극 수행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혁,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뒷받침

출처: 기획재정부(2020b), (2021b), (2022b)를 참고하여 정리

요를 충족하는 과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여력의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지출의 방향성 측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예산안 및 중기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긴요한 수단으로써 지출의 재구조화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총지출 추이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는 최근 추이에 비해서는 낮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10여 년간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 때, 균형재정에 가까운 수준으로의 급격한 방향 전환보다는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증가했던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다소 완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속도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 및 필수적인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앞서 OECD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 다양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II. 재정 총량

1. 재정수입

2023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규모이며, 2022년 확정 추가경정예산의 609.1조원에 비해 2.76%가량 증가하였다(<표 3> 참조).⁴⁾ 국세수입, 세

외수입, 기금수입의 2022년 추경예산 대비 변동률은 각각 0.98%, -10.95%, 8.8%로 나타났는데,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예상 기금수입의 증가가 총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경호(2021)에 제시된 2022년 예산안의 2021년 추경예산 대비 총수입 항목별 변동률이 국세수입 7.8%, 세외수입 -8.9%, 기금수입 7.3%였던 것을 고려하면 2023년 예산안의 전년 추경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예상 증가율이 2022년 예산안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2022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 국민연금 등의 기금수입이 국세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국세수입에 비해 기금수입은 근로소득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자산시장의 둔화 영향을 보다 적게 받기 때문일 수 있다.

급변하는 현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2022년의 최종 국세수입 실적이 추경예산의 예상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최신 국세수입 진도율을 고려하면 2022년 전망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2022e)에 따르면 2022년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0조원으로, 2차 추경예산 국세수입 396.6조원 대비 65.8%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최신 2022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추경예산과 유사한 수준인 397.1조원으로 전망되었다. 과거 진도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8년과 2019년의 7월 국세수입 누계(예산 대비 진도율)는 각각 190.2조원(70.9%),

4) 본고는 “추가경정예산”과 “추경예산”을 동일한 의미로 혼용한다.

5) 2022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0년 실적 대비 38.7%, 2021년 실적 대비 15.1% 증가한 수치이다.

<표 3>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안	2022년 대비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본예산	본예산	추경	2024	2025	2026	
총수입	553.6	609.1	625.9	13.06	2.76	655.7	685.6	715.2	6.6
국세	343.4	396.6	400.5	16.63	0.98	418.8	439.2	459.9	7.6
세외	26.1	28.3	25.2	-3.45	-10.95	26.9	27.7	28.1	1.9
기금	184.1	184.1	200.3	8.80	8.80	210.1	218.7	227.2	5.4
총지출	607.7	679.5	639.0	5.15	-5.96	669.7	699.2	728.6	4.6
예산	413.0	449.8	441.3	6.85	-1.89	457.9	475.8	494.6	4.6
기금	194.6	229.7	197.7	1.59	-13.93	211.9	223.4	234.1	4.7
의무지출 (비중)	303.2 (49.9)	329.7 (48.5)	341.8 (53.5)	12.73	3.67	361.8 (54.0)	382.5 (54.7)	405.1 (55.6)	7.5
복지 분야 법정지출	140.0	139.7	154.6	10.43	10.67	164.8	177.7	189.7	7.9
지방이전재원	134.9	157.8	156.9	16.31	-0.57	163.8	169.1	177.1	7.2
이자지출	18.9	18.8	22.9	21.16	21.81	25.8	28.5	30.9	13.0
기타의무지출	9.5	13.4	7.3	-23.16	-45.52	7.4	7.2	7.3	-6.2
재량지출 (비중)	304.5 (50.1)	349.8 (51.5)	297.3 (46.5)	-2.36	-15.01	307.9 (46.0)	316.7 (45.3)	323.6 (44.4)	1.5
조세부담률	23.3		22.6	·	·	22.7	22.8	22.9	·
국민부담률	31.1		30.7	·	·	30.8	31.0	31.3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94.1 (-4.4)	-110.8 (-5.1)	-58.2 (-2.6)	·	·	-58.6 (-2.5)	-57.4 (-2.3)	-56.6 (-2.2)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54.1 (-2.5)	-70.4 (-3.3)	-13.1 (-0.6)	·	·	-14.0 (-0.6)	-13.7 (-0.6)	-13.4 (-0.5)	·
국가채무 (GDP 대비 %)	1064.4 (50.0)	1068.8 (49.7)	1134.8 (49.8)	·	·	1201.2 (50.6)	1271.9 (51.4)	1343.9 (52.2)	·
경상GDP 성장률	·	·	·	·	·	4.2	4.2	4.0	·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도별 증가율의 평균이며 본예산 기준임.

출처: 기획재정부(2022b)

189.4조원(64.2%)을 기록하였다. 해당 연도의 추경예산 국세수입 규모가 각각 268.1조, 294.8조원이었고, 최종적인 징수 실적이 293.6조, 293.5조원으로 추경예산 국세수입 규모를 다소 초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올해의 최종적인 추경예산 국세수입 실적은 추경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의 금리 인상·자산시장의 냉각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2023년 국세수입의 불확실성에 우려 또한 제기될 수 있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은 2022년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22년 7월까지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추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표 4>는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전망 내용을 제시한다.

<표 4>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 7월까지의 실적을 반영한 최신 2022년 국세수입 전망 총량은 매우 유사한 수준(추경예산 대비 +0.4조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세목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일부 세목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변화된 경제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수입은 2022년 추경예산의 34.2조원에 비해 2022년 최신 전망 수치에서는 30.7조원 수준으로 다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의 냉각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추경예산과 2022년 최신 전망 수치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자산시장의 냉각을 비롯한 최근 거

시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및 증권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은 감소하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소득과 소비와 관련된 세목은 소폭 증가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의 전망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둔화 정도가 2022년 상반기보다 더 큰 폭으로 냉각되는 등 추가적인 위험 요인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3% 수준으로 제시된 2023년 물가상승률 전망 수치를 고려하면 2022년 최신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1%를 하회하는 수준의 국세수입 증가율이 전망된 2023년 예산안의 국세수입 전망 수치는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기금수입의 증가율은 2022년 추경예산 대비 8.8%로 제시되었다. 추경예산 대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증가율 전망(각 14.7%, 4.6%)을 고려하면 소득에 의존하는 보험료 성격의 기금수입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에 더해 가입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보수월액의 증가는 소득 증가와 별도로 기금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년 결산 기준 기금수입(195.8조원) 중 소득에 기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보장기여금(78.1조원)과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납부연금기여금 및 지자체 연금부담금 등이 포함되는 경상이전수입(30.0조원)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3년 기금수입 증가 예상분의 상당 부분이 소득 기반 보험료 수입의 증가 예측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 단,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6) 기획재정부(2018b), (2019b)와 e나라지표 웹사이트의 국세수입실적 수치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7) 해당 수치는 기획재정부(2022g)에 제시되었다.

따라 기금이 보유한 자산에서 기인하는 운용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기계획에서 국세수입의 2022~2026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제시되었다. 본예산 기준의 연도별 증가율은 2023년 16.6%, 2024년 4.6%, 2025년 4.9%, 2026년 4.7%로, 7.6%의 평균 증가율에는 2022년 본

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이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의 증가율 전망은 중기 시계에서 경제 성장 속도와 비교하여 약간 빠른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세입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시계 전망치의 적절성은 2022년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2022년 추경예산 및 2023년 국세

<표 4> 2022~2023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실적	2022년		2023년 예산안	2022년 추경 대비		2022년 전망 대비	
		2차추경	전망		증감액	%	증감액	%
총국세	3,440,782	3,966,498	3,970,886	4,004,570	38,072	1.0	33,684	0.8
[일반회계]	3,325,048	3,862,322	3,862,084	3,902,539	40,217	1.0	40,455	1.0
내국세	2,964,450	3,519,217	3,530,906	3,579,676	60,459	1.7	48,770	1.4
소득세	1,141,123	1,278,459	1,279,657	1,318,632	40,173	3.1	38,975	3.0
종합소득세	159,902	215,587	243,003	247,255	31,668	14.7	4,252	1.7
양도소득세	367,072	342,228	307,367	297,197	-45,031	-13.2	-10,170	-3.3
근로소득세	472,312	579,534	579,336	606,216	26,682	4.6	26,880	4.6
법인세	703,963	1,040,662	1,051,261	1,049,969	9,307	0.9	-1,292	-0.1
상속증여세	150,062	159,036	157,972	171,274	12,238	7.7	13,302	8.4
부가가치세	712,046	793,233	802,886	832,035	38,802	4.9	29,149	3.6
개별소비세	93,638	101,418	92,427	101,943	525	0.5	9,516	10.3
증권거래세	102,556	75,380	70,641	49,739	-25,641	-34.0	-20,902	-29.6
인지세	9,598	9,480	8,487	8,158	-1,322	-13.9	-329	-3.9
과년도수입	51,465	61,549	67,575	47,926	-13,623	-22.1	-19,649	-29.1
교통·에너지·환경세	165,984	109,022	112,306	111,471	2,449	2.2	-835	-0.7
관세	82,270	100,613	105,852	107,237	6,624	6.6	1,385	1.3
교육세	51,039	47,266	44,916	47,022	-244	-0.5	2,106	4.7
종합부동산세	61,302	86,204	68,104	57,133	-29,071	-33.7	-10,971	-16.1
[특별회계]	115,734	104,176	108,802	102,031	-2,145	-2.1	-6,771	-6.2
주세	26,734	37,374	34,388	32,151	-5,223	-14.0	-2,237	-6.5
농어촌특별세	89,000	66,802	74,414	69,880	3,078	4.6	-4,534	-6.1

출처: 기획재정부(2022e)

수입 전망 수치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지에 일정 부분 의존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기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자산시장과 법인 실적의 향후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실제 국세수입의 증가 속도가 예상치보다 다소 낮게 실현될 가능성에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⁸⁾

2. 재정지출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39조원 규모로 2022년 확정 2차 추가경정예산의 679.5조원에 비해 약 6% 감소, 본예산의 607.7조원에 비해 약 5.2% 증가하였다. 본예산 기준 증가율 5.2%는 2018~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8.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예산안에

서 제시한 건전 재정 기초의 확립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한다는 방침과 일치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이 기초는 유지되어 2022~2026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4.6%로 2023년 예산안의 증가율에 비해 소폭 더 낮게 제시되었다.

총량 편성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필수적인 재정 수요의 충족 여부와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재정 수요의 충족 여부는 총량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지출은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 또는 사회보험료의 인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총수입 증가 요소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총수입의 증가가 인구구조 및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총지출 증가 속도를 상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량

<표 5> 2012~2021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지출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58.0
GDP 대비	20.1	20.5	21.3	21.0	21.0	21.7	21.6	21.9	23.6	23.4	25.3	27.6
전년 대비 증가율	.	5.6	5.3	5.1	4.0	5.5	2.9	3.6	7.1	9.5	9.1	8.9

주: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각 연도 본예산 기준임.

출처: e-나라지표의 정부재정 현황 웹사이트 참고, 해당 통계는 기획재정부의 「한국통합재정수지」,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음.

8) IMF는 최근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바 있다(「한국경제」,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2.3%...내년은 0.8%p 내려」, 2022. 7. 26.).

지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향 전환의 정도 또한 중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만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출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등 필수적인 재정 수요의 충족, 국정과제의 이행, 경직성이 강한 지출 항목의 존재,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총지출 전망과 과거 총지출 추이를 비교하면, 코로나19 대응 요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2018~2021년 기간보다 과거의 총지출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율을 하향시키는 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2010~2021년의 본예산 기준 총지출의 추세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제시한 것이다. 2018년 이후의 총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2011~2017년 기간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1년에는 5.6%, 2012~2017년 기간에는 연평균 4.4% 수준을 기록하여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증가율 수준보다 대체로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 수준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정 투입 분야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생각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 의지에 대한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급격한 재정기조 전환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총량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의무지출의 증가율이 재량지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표 3>).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출 분야에서 지출 규모의 조정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고려하면 재정기조의 전환 과정에서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022~2026년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전망되어 있으며, 이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 6.5%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 분야 법정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의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9%, 7.2%, 13.0%, -6.2%로 계획되어 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6.6%, 7.4%, 3.5%, -1.7%로 계획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자지출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 이 점은 누적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는 점에 더해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기준 의무지출 편성 규모의 2012~2022년 추이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재원이 의무지출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되는데, 국세수입의 전망과 강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자지출은 누적된 국가채무의 규모, 국고채의 만기구조 및 금리에 연동되는 지출 항목이다. 따라서 두 항목의 지출 전망은 경제변수의 전망과 연관성이 높음에 따라 경제변수

전망과의 일관성이 확보된다면 예산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별도의 쟁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⁹⁾

복지지출은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법상 의무적인 지출이지만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의 노력이 정부의 지출 계획에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국회예산정책처(2022)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훈 등 기타 의무지출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상대적인 비중은 2022년 추경예산 기준 각각 42.8%, 24.3%, 26.6%, 6.3%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 그 비중은 47.6%, 21.6%, 25.8%, 5.0%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규모와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 때 복지 분야 법

정지출의 증가를 이끄는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기계획의 복지 분야 법정지출 증가는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으로 구성된 4대 공적연금 지출의 빠른 증가(2022~2026년 연평균 9.8%)에 더해 기초연금(동 기간 연평균 10.3%), 국민기초생활보장(동 기간 연평균 9.6%)의 증가를 통해 대체로 설명된다. 고령인구의 증가, 연금제도의 성숙,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지 분야의 무지출의 빠른 증가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재량지출에 대한 통제에 전적으로

<표 6> 2012~2022년 본예산 기준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지출	151.9	158.4 (4.3)	167.2 (5.6)	172.6 (3.2)	182.6 (5.8)	197.0 (7.9)	217.0 (10.2)	239.3 (10.3)	255.6 (6.8)	266.1 (4.1)	303.2 (13.9)
복지지출	59.0	62.2 (5.4)	69.8 (12.2)	77.5 (11.0)	83.3 (7.5)	87.2 (4.7)	95.7 (9.7)	106.7 (11.5)	119.7 (12.2)	131.3 (9.7)	140.0 (6.6)
지방이전재원	71.5	76.6 (7.1)	76.6 (0.0)	74.3 (-3.0)	77.4 (4.2)	87.6 (13.2)	99.4 (13.5)	111.5 (12.2)	111.6 (0.1)	108.9 (-2.4)	134.9 (23.9)
이자지출	17.3	15.5 (-10.4)	16.8 (8.4)	16.5 (-1.8)	16.7 (1.2)	16.1 (-3.6)	16.0 (-0.6)	16.0 (0.0)	17.0 (6.3)	18.3 (7.6)	18.9 (3.3)
기타 의무지출	4.1	4.1 (0.0)	4.1 (0.0)	4.3 (4.9)	5.2 (20.9)	6.0 (15.4)	5.8 (-3.3)	5.1 (-12.1)	7.4 (45.1)	7.6 (2.7)	9.5 (25.0)
재량지출	173.5	183.6 (5.8)	188.6 (2.7)	202.8 (7.5)	203.8 (0.5)	203.5 (-0.1)	211.9 (4.1)	230.3 (8.7)	256.6 (11.4)	291.9 (13.8)	304.5 (4.3)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출처: 기획재정부(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a), (2019a), (2020b) 참고.

9) 단, 국고채 발행 시점, 만기 구조의 구성 등 재정당국의 행동에 따라 미래 이자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등 해당 항목도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존재한다.

의존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및 필수적 재정수요 충족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재정여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무지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의무지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재정혁신 방안에 담긴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안건들인 만큼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다소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2022년 대비 큰 폭의 재량지출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대응 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정책들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 속도를 정상화하고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2023년 이후의 재량지출 증가 속도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 4.5%)이나 <표 6>에 제시된 본예산 재량지출의 추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명목금액입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된 계획으로 판단된다. 의무지출 증가 속도에 비해 낮은 속도로 재량지출을 억제해야 총지출 증가 속도를 하향할 수 있지만, 2023년에 큰 폭으로 재량지출이 줄어든 이후에도 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직성 재량지출 중 인건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경우 저임금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경직적인 재량지출 중 한 분야인 국방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안보 관련 요인들로 인해 큰 규모의 신규 지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 중요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될수록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당국은 과거 지출 구조조정의 결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추진 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지 전망은 재정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재정준칙의 목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3년 2.6%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6년에는 2.2%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0.6%의 적자비율을 기록한 후 대체로 일정한 수준의 적자비율을 유지하여 2026년에는 0.5% 수준의 적자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2020~2024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크게 낮아졌다([그림 2 참조]). 2025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2021~2025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2025년 국가채무비율의 전망 결과인 58.8%와 비교하면 7.4%p가량 감소한 것이다([그림 3] 참조).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재정지출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D2 비율은 42.2%를 기록하였으며, 미국(108.2%), 일본(234.9%), 캐나다(86.8%)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송경호, 2021).

그러나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지출은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대수명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인구구조로 인해 향후 고령 인구집단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지출과 치매를 비롯한 보건 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인 국회예산정책처(2022)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2년 추경예산 기준 15.7%에서 2070년에는 2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동 기간 6.5%에서 13.2%로 증가하는 것에 크게 기인하며, 세부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실질)은 국민연금 4.8%, 사학연금 1.6%, 기초연금 1.6%, 국민기초생활보장 1.5%, 군인연금 1.4%, 공무원연금 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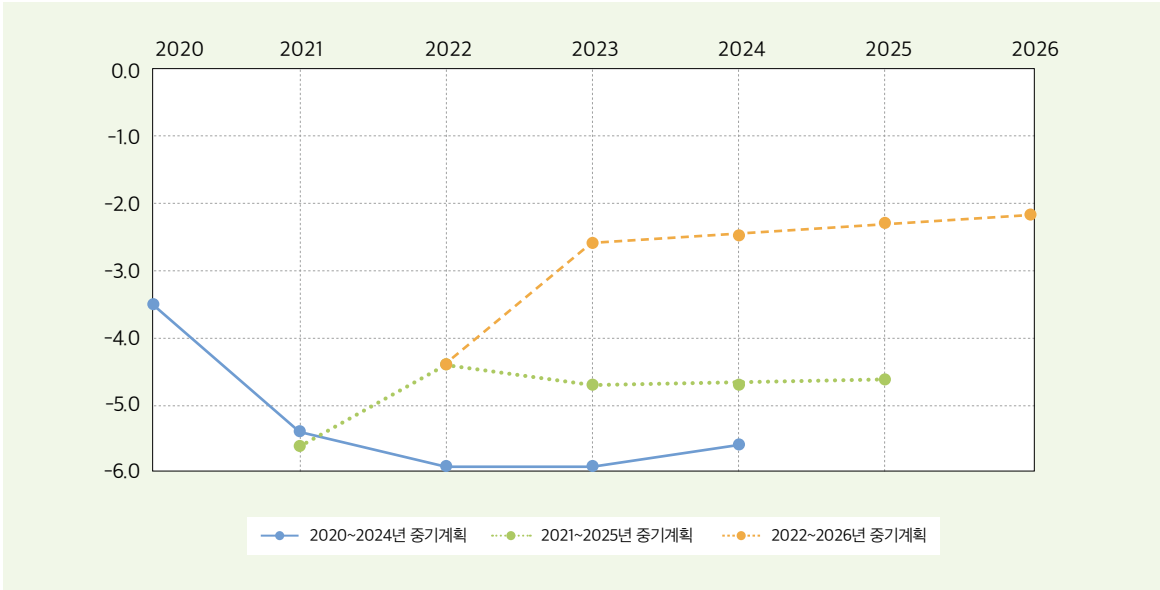
전망 결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25년까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재량지출 규모를 준용하고, 2026~2030년에 걸쳐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2.8%로 수렴한 후 해당 비율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적용한 결과,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은 192.6%로 전망되었다.¹⁰⁾ 2022년 추경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6.1%였던 것을 고려하면 5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재량지출 감축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전망 결과가 도출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연금 지출에 대해 다양한 구조개혁 논의가 존재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론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보험료를 인상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정부의 재정수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고령 인구비중 증가 및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

10) 12.8%는 2012~2022년 기간의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의 평균치로 제시되었다.

[그림 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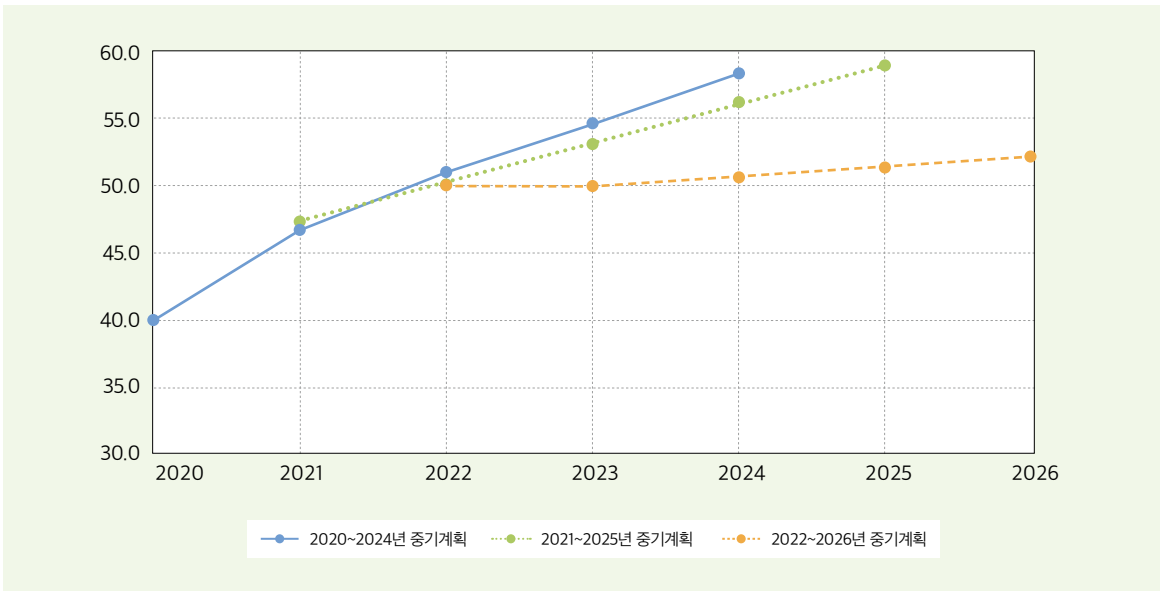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2020b, 2021b, 2022b)

[그림 3]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2020b, 2021b, 2022b)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료비 지출 역시 잠재적인 재정 위협 요소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¹⁾ 이러한 장기 재정 위협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비록 당장의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더라도 재정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의 유지라는 목표와 동시에 필수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선도 기술에 대한 투자, 저소득층에 대한 필수적인 복지 지원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세체계, 사회보험료 체계, 의무지출의 구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재량지출에 대한 통제에 의존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시도할 경우 이와 같은 분야들의 수요에 재정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재량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되, 연금 개혁 등 전반적인 재정구조와 관련된 종합적인 구조 개혁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Ⅲ. 분야별 자원배분

<표 7>은 2022~2026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모든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던 2021~2025년 중기계획과 달리, 2023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문화·체

육·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감축이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가율이 총지출의 평균 증가율 5.2%를 상회하는 분야는 교육(14.2%), 외교·통일(7.3%), 일반·지방행정(13.9%)이며,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높은 지출 증가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국세 수입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구조를 갖는 지방이전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 2023년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하여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증가하였던 지출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의 지출 규모 감축은 제외한 후 재원 배분의 중기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의 마지막 열은 2024~2026년의 분야별 재정투자 증가율의 단순 평균을 보조적으로 제시한다. 지출 분야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2022~2026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고용(6%)과 일반·지방행정(5.8%)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R&D(3.9%), 외교·통일(3.9%), 공공질서·안전(3.9%), 국방(3.8%) 분야가 증가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대략 연평균 4% 수준의 증가율이 계획되어 있다. SOC(1.2%), 농림·수산·식품(1.0%)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다.

다음으로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의 주안점을 간략히 살펴봐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 보건·복지 분야의 자원배분 방향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두루누리

11) 재정수지에 반영되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출은 각 보험의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의미한다.

<표 7> 2022~2026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6 증가율	2024~26 증가율
총지출	607.7 (8.9)	639.0 (5.2)	669.7 (4.8)	699.2 (4.4)	728.6 (4.2)	(4.6)	(4.5)
보건·복지·고용	217.7 (9.0)	226.6 (4.1)	238.6 (5.3)	254.4 (6.6)	269.5 (6.0)	(5.5)	(6.0)
교육	84.2 (18.2)	96.1 (14.2)	100.3 (4.4)	101.7 (1.4)	105.9 (4.1)	(5.9)	(3.3)
문화·체육·관광	9.1 (7.3)	8.5 (-6.5)	8.7 (2.7)	8.9 (1.9)	9.1 (1.8)	(-0.1)	(2.1)
환경	11.9 (12.4)	12.4 (3.9)	12.9 (4.0)	13.3 (2.8)	13.5 (2.0)	(3.2)	(2.9)
R&D	29.8 (8.7)	30.7 (3.0)	32.0 (4.4)	33.2 (3.6)	34.4 (3.6)	(3.7)	(3.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9.3)	25.7 (-18.0)	26.6 (3.5)	27.4 (3.0)	28.1 (2.6)	(-2.6)	(3.0)
SOC	28.0 (5.5)	25.1 (-10.2)	25.5 (1.5)	25.8 (1.1)	26.0 (1.0)	(-1.8)	(1.2)
농림·수산·식품	23.7 (4.5)	24.2 (2.4)	24.5 (1.0)	24.7 (1.0)	24.9 (0.9)	(1.3)	(1.0)
국방	54.6 (3.4)	57.1 (4.6)	59.5 (4.2)	61.8 (3.8)	63.8 (3.4)	(4.0)	(3.8)
외교·통일	6.0 (4.4)	6.4 (7.3)	6.7 (5.4)	7.0 (3.5)	7.2 (2.8)	(4.7)	(3.9)
공공질서·안전	22.3 (0.1)	22.9 (2.4)	23.8 (4.0)	24.7 (3.9)	25.6 (3.8)	(3.5)	(3.9)
일반·지방행정	98.1 (15.8)	111.7 (13.9)	120.3 (7.6)	126.5 (5.2)	132.2 (4.5)	(7.7)	(5.8)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출처: 기획재정부(2022b)를 이용하여 작성

사업 지원요건 완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장애인·노인·취약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확충이 제시되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는 지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언급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보장성 확대와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 중점 투자 분야로 보인다. 반면 2021~2025년에 국가재정운용계

획에서 언급되었던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비해 금년 계획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소요에 대한 지원 및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확충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민간의 역할 강조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이 강조되었던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민간 분야의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에 투자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가 비중 있게 언급되었는데, 금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기타 신기술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는 전년도에 이어 연속성을 갖는 투자 방향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년도에 이어서 강조되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평생교육바우처 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들도 연속성을 갖고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에 새롭게 제시된 방향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자 증가 등 장래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 및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 중기계획에서 강조되었던 콘텐츠 투자 확대, 콘텐츠 다변화 지원,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관광 활성화, 생활체육 지원 등 대부분의 투자 방향이 큰 틀에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R&D 분야는 구체적인 투자 분야 측면에서 전년도 중기계획에 비해 다양한 변화가 관찰된다. 2021~2025년 중기계획에서는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 장비, 코로나19 관련 백신기술 등이 주요 투자 분야로 언급된 반면, 금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반도체, 핵융합 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초격차 기술에 대한 투자,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인재양성이라는 투자 방향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성과 중심 R&D 투자 등 질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새롭게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 중소기업에 소규모로 분배되는 R&D 사업을 축소하고 경쟁형·다부처 협업형 R&D, 임무지향적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향이 언급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최근의 국제 상황을 반영하여 공급망 및 수출여건 개선을 통해 대외경제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고, 수소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재건이 주요 자원배분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창업기업 지원정책을 민간 중심·혁신성장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SOC분야는 투자 적정화가 강조되었는데, 그동안의 지출 확대를 인식하여 투자 규모를 적정화하되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신규사업 소요 대응을 위한 예산은 반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도로 보수, 선로개량, 기후변화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는 안전투자 또한 주요 자원배분 방향으로 언급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농어업 미래성장 산업화, 재해예방 강화, 물가안정 등 주요 방향을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지원 등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폐기물에 대한 투자 등 주요 방향이 대체로 유지되었는데, 2022~2026년 중기계획에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사태와 관련하여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국방 분야의 투자 방향도 대체로 큰 틀에서 유지되었다. 첨단기술 기반 국방전력 확충, 스마트 국방 구현, 방위산업 지원, 복무여건 조성 등은 전년도 계획에 이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위산업 지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특징적인 정책으로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을 '25년까지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외교·통일 분야의 투자 방향으로 언급된 ODA 확대, 외교 지원 확대는 전년도 계획과 연속성이 있는 항목이다. 반면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 중기계획에서 강조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에 비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가 강조된 점이 차이점이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신종범죄 예방 강화가 전년도에 이어 언급되었다. 금년도 계획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스마트 재난 대응·관리체계 구축이 새롭게 제시되었으며, 반면 전년도에 언급되었던 수용환경 개선,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관 역량 강화 지원은 금년도 계획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특징은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민간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스스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디지털 정부혁신, 지방소멸대응, 소외지역 지원이 전년도에 이어 중기계획에 포함되었다. 반면 민주화 기념사업 및 과거사 정리는 금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

한 금융지원 확대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은 다양한 이유로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의 실적을 관찰한 결과 당초 의도했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제시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방향의 초점을 큰 틀에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점 투자방향의 변화는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방향의 변화 이유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보완 및 제공된다면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재정혁신 추진방향

전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관리하고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3대 재정혁신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3대 재정혁신 방안에는 지출 구조조정, 공동과제의 발굴·기획·집행을 통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현장·지역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의 예산 공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전 재정을 표방한 만큼 재정혁신 추진방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강한 방안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음 여섯 가지의 재정혁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의 법제화,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 중장기 재정운용전략 수립·추진이 강조되었는데, 재정준칙 법제화와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은 미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도가 높은 재정개혁 방안으로 판단된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아래를 유지하여 재정준칙에 제시된 목표를 만족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무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으로 인해 감염병 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정의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준칙의 예외사유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제시된 것 또한 적절하다. 추가로 현재는 공적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지만,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공적연금 성숙도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박노욱(2022)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 재정수지 준칙을 별도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미래 재정준칙 보완 과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이슈로 판단된다.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방향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제도 전반의 개혁 논의, 그리고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및 지출 적정화 방안의 강구이다. 미래 예상되는 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공적연금 지출 증가에 의한 것으

로 예상되므로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 지출에 대해서는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고가의 신약 등 의료기술의 발전, 치매 등 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를 비롯한 이슈가 존재한다. 건강보험료율의 법상 상한선이 8%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은 재정혁신 추진방향으로서 중요성이 높고 시급한 목표이다. 이에 더해 공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령인구에 비례하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지출 항목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미래 지출 부담과 타 연금제도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동반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어 온 혁신 방향이다. 지출 구조조정의 초점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재원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재배분하는 것에 있으며, 한정된 재정지출 여력을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관행적 민간보조금의 재정비, 기금 정비가 재정혁신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두 방안 또한 기본적인 취지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가 가능한 재정여력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정부조직의 정비,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은

가능한 방안이나, 절감 가능한 규모의 상한선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이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선별하여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 예산을 일정 비율로 정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효과성 측면에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이나, 사업 목적이 다양하고 각각의 평가지표가 상이한 사업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또한 실무적 측면과 수용성 측면에서 어려운 과제이다.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이 관련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여력 압박을 고려하면 지출 효율화 방안 중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정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이슈는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 개혁과 관련이 높음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 재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를 고려하여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되,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세 번째 방향은 재정제도의 개혁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예타제도 개편,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가 제시되었는데, 이 중 미래 재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고 사회적 논쟁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는 현재 보통교부금으로 활용되는 국세

분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결국 한정된 재정 여력의 배분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과제임은 부인하기 어렵고, 고등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배분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교육 투자 재원의 양적 배분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재원을 고등교육 분야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동반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언급되었으나,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수입기반 확충 및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AI 기반 과학적 재정운용이 주요 재정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는데, 해당 방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성과 관리체계의 강화는 실질적 성과에 근거한 재정운용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이다.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의도한 궁극적인 성과의 달성 여부를 전문가들이 적절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는 작업이 체계화된다면 성과평가 DB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금년에 발표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지출의 증가 속도 하향과 더불어 강화된 재정준칙, 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들은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들을 명시함으로써 재정당국이 지향하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언급된 많은 과제들은 재정당국의 실행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정준칙 법제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이며, 이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령·소득수준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 개편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할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논의의 진전을 위해 미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정당국의 우려와 그 근거, 세대 간 분배 문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 및 공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 수입의 불확실성,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도전적 요소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수입 측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정혁신 추진방향에 언급된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추진이 사회보험료 수입과 관련되어 있지만, 미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자세 및 국민부담률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르는 조세·사회보험료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이후 다양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역할의 충실한 수행이 균형 있게 고려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 전망』, 2022.
- 기획재정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
- _____,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

- _____,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
- _____,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 _____,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
- _____,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
- _____,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a.
- _____,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a.
- _____,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b.
- _____,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b.
- _____,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b.
- _____, 『월간 재정동향』, Vol. 56, 2018. 9, 2018b.
- _____, 『월간 재정동향』, Vol. 68, 2019. 9, 2019b.
- _____, 『월간 재정동향』, Vol. 103, 2022. 8, 2022g.
- _____, 『2021년 예산안』, 2020a.
- _____, 『2022년 예산안』, 2021a.
- _____, 『2023년 예산안』, 2022a.
- _____, 보도자료, 「재정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60년 국가채무비율 60%대 수준으로 관리 -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및 사회연금보험 개혁 필요 -」, 2020. 9, 2020c.
- _____, 보도자료,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2. 8., 2022c.
- _____, 보도자료, 「2023 예산안 인포그래픽」, 2022. 8., 2022d.
- _____, 보도자료,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2022. 8., 2022e.
- _____, 보도자료, 「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2022. 8., 2022f.
- 박노옥,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통권 제 314호, 2022 8., pp. 8~29.
- 송경호,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재정포럼』, 통권 제303호, 2021. 9., pp. 62~7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2022』, 2022.
-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검색일자: 2022. 9. 8.
- e나라지표, 정부재정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검색일자: 2022. 8. 31.
- 『한국경제』,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2.3%... 내년은 0.8%p 내려」, 2022. 7. 2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65009Y>, 검색일자: 2022. 9. 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서명]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함¹⁾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Chuck Schumer와 상원의원인 Joe Manchin이 에너지·기후변화 및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입장을 타결하면서 만든 예산 화해 법안임²⁾

■ 해당 법안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³⁾

- 7,390억달러⁴⁾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함

-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2022년 이후 내국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과세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연간 매출이 10억달러⁵⁾ 이상인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함으로써 3,130억달러⁶⁾의 예산을 확보

- 2026년부터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⁷⁾의 메디케어 협상을 통해 처방약 가격을 개혁함으로써 2,880억달러⁸⁾의 예산을 확보

- 미국 국세청(IRS)의 세금 집행을 통해 1,240억달러⁹⁾의 예산을 확보

- 이월 이자의 허점을 제거하여 140억달러¹⁰⁾의 예산을 확보

- 확보된 예산 중 재정적자를 감축하는데 지출하는 3,000억달러¹¹⁾를 제외하고 가용한 지출범위

1)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Signing of H.R. 5376,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8/16/remarks-by-president-biden-at-signing-of-h-r-5376-the-inflation-reduction-act-of-2022>, 검색일자: 2022. 8. 18.

2) CNN, "In a major boost to Democrats, Manchin and Schumer announce deal for energy and health care bill," <https://edition.cnn.com/2022/07/27/politics/schumer-manchin-deal-build-back-better/index.html>, 검색일자: 2022. 8. 18.

3) Senate Democrats, "Inflation Reduction Act One Page Summary," <https://www.democrats.senate.gov/inflation-reduction-act-one-page-summary>, 검색일자: 2022. 8. 18.

4)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9조 8,905억원임

5)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395억원임

6)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9조 2,635억원임

7) CMS는 65세 이상 인구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임

8)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5조 7,760억원임

9)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6조 980억원임

10)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조 7,530억원임

11)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1조 8,500억원임

인 4,330억달러¹²⁾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제안함

- 2021년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확대된 ‘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을 확대하는데 640억달러¹³⁾ 지출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에 3,690억달러¹⁴⁾ 지출
- 태양광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장기 연장하여 설치된 장비 비용의 30%를 10년간 공제하고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축소하여 적용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¹⁵⁾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2030년까지 자국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확대할 계획
 -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업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독일 - 가스 사용 부담금 부과 및 가스 부가가치세율 인하]

■ 독일 가스공급합작회사인 트레이딩허브유럽(Trading Hub Europe GmbH)은 2022년 8월 15일 급격히 치솟는 수입 가스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가스사용부담금(gas levy)을 부과하기로 발표함^{16), 17)}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소비자는 천연가스 사용량 1kWh당 2.419센트¹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 가스 사용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독일 재무부는 국민의 가스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스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19%에서 7%로 인하하기로 함¹⁹⁾

-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12)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0조 35억원임

13)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조 7,280억원임

14)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4조 2,755억원임

15)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04조 6,250억원임

16) TRADING HUB EUROPE, "Pressemitteilung Gasbeschaffungsumlage ab Oktober 2022," <https://www.tradinghub.eu/de-de/Unternehmen/Newsroom/News/Details/ArtMID/1404/ArticleID/100/Pressemitteilung>, 검색일자: 2022. 8. 25.

17) IBFD, Germany Introduces Temporary Gas Levy on Household Consum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16_de_1.html, 검색일자: 2022. 8. 17.

18) 2022년 8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원임

19) 독일재무부, "Mehrwertsteuer auf Gas wird gesenkt," <https://www.bundeskanzler.de/bk-de/gasumlage-mehrwertsteuer-2075248>, 검색일자: 2022. 8. 25.



[벨기에 - 조세 개혁 청사진 제안]

■ 벨기에 재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18일, 조세 개혁 청사진을 제안함²⁰⁾

- 청사진은 향후 10년의 조세 체계에 대한 주된 방향을 제시함
- 청사진에 담긴 제안에 기초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실행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함

■ 소득세 구간 변동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제안함

- 구간별 소득세율을 인하하며 소득세율 구간을 4단계로 증가시키고, 특정 경제 활동에 대한 근로 소득의 일부를 과세하지 않음
 - 구간별 소득세율을 현행 40%, 45%, 50%에서 35%, 40%, 45%로 각 5%씩 인하하고, 84,740유로²¹⁾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함
 - 공유 경제 활동, 협회를 위한 근로, 정규 근로에 추가하여 제공하는 부수적인 근로 또는 임시적인 근로에 대한 소득 중 6천유로²²⁾는 과세하지 않음
 -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에서 ‘급여’의 정의를

일치시킴

- 중소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정책을 제시함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최저 과세구간의 기준액을 10만유로²³⁾에서 20만유로²⁴⁾로 상향함
 -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를 도입함

■ 배당 및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 제도와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정을 제안함

- 배당 및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제안함
 - 배당·이자·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고, 관련 면제 제도를 폐지(전환 제도가 적용될 예정)함
 - 임대소득에 대한 25%의 원천징수세를 도입하고, 첫 3천유로²⁵⁾는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공제함
 - 증권거래세 및 증권 계좌에 대한 조세를 폐지함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전기 등과 관련한 경감 정책을 도입하고, 경감 부가가치세율을 단일화함
 - 전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기존 2단계의 경감 부가가치세율(6% 및 12%)을

20) Vanpeteghem, “Épure pour une vaste réforme fiscale,” <https://vanpeteghem.belgium.be/sites/default/files/articles/Blauwdruk%20FR.pdf>, 검색일자: 2022. 8. 17.; IBFD, “Blueprint for Tax Reform Would Cut Rates, Modernize System,” 2022.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be_2.html, 검색일자: 2022. 8. 17.

21)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420만원임

22)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3만원임

23)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474만원임

24)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6,949만원임

25)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6만원임

- 단일 경감 부가가치세율(9%)로 대체함
- 야채, 과일, 건강식품, 공공운송수단에 대한 영세율(0%)을 도입함
- 탄소 부담금을 도입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스페인 - 에너지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초과이윤 부담금 관련 법안 초안 제출]

- 스페인은 2022년 7월 28일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은행의 한시적 이익에 대해 새로운 초과이윤 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26), 27)}
- 2022년 6월 25일 각료 회의를 통해 에너지 회사에 대하여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2년 7월 12일 총리는 국정 토론에서 이를 은행 부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해당 계획은 부담금(non-tax contribution) 부과 형태로 확정되었으며, 본 법안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해당 부문의 이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과하여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 기업 및 은행에 대한 부담금은 2023년과 2024년 각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됨

- 에너지 기업에 대한 부담금은 2019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유로를 넘는 기업의 순매출액에 대해 1.2%의 요율로 부과됨
- 통합 과세가 적용되는 에너지 그룹의 경우 그룹 내 매출량을 고려하여 주요 석유, 가스 및 전기 사업자의 회사에 부과금이 적용됨
-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에너지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은행 부문에서는 은행의 순이자수입과 은행 중개 마진에 대해 4.8%의 부담금을 부과함
- 2019년 이자 수입과 은행 중개 마진이 8억유로 미만인 은행은 제외됨
- 납부기한은 9월 20일까지로, 2월 20일까지 납부액의 50%를 선납해야 함

- 초과이윤 부담금은 법인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담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부과된 금액의 1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그리스 - 연구비에 대한 세제 혜택 관련 법률 발표]

- 그리스 정부는 2022년 7월 21일 연구비에 대한 R&D 공제 및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 No. 4957을

26) IBFD, "Draft Windfall Profit Tax Bill on Energy Companies and Banks Submitted to Parliament," 2022. 8.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8-03_es_1, 검색일자: 2022. 8. 22.

27) IBFD, "Planned Windfall Profit Tax on Energy Sector Extended to Banks, Prime Minister Says," 2022.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14_es_1, 검색일자: 2022. 8. 22.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28), 29)}

- 그리스의 고등교육 기관인 HEI의 특수연구기금계정(ELKE)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해 R&D 사업 비용을 소득공제함
- 해당 비용과 관련한 R&D 사업의 목록을 제공함
 - 산업 계열의 박사학위 준비, 연구 파트너십 개발, 산업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임상시험 준비 등과 관련된 사업 비용이 이에 해당함
- 그리스 HEI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특허에 대해 이익 실현 연도로부터 최대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함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연구환급계정을 통해 취득한 과학 및 기타 장비에 대해 100%의 감가상각비를 허용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핀란드 - 2023년 예산안 발표]

- 핀란드 재무부는 2022년 8월 5일 2023년 예산안(TALOUSARVIOKSI 2023)을 발표함³⁰⁾
 - 법인세 이자비용 공제한도 폐지, 개인소득세 과

세표준 구간 조정, 소비세 인상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구체적 개정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세부사항은 정부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중에 공표될 예정임

- (법인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연구개발비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임

- (개인소득세) 기존 예정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이 폐지되거나 도입될 예정임

- 소득세 세율구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연동, 통근비용 소득공제 확대 적용 등은 유지됨
 - 세율 적용 표는 통상적으로 매년 갱신되며, 2022년도에는 연간 19,200유로³¹⁾ 이상의 소득에 대해 4구간으로 나누어 6~31.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³²⁾
 - 2022년 7월 1일부터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통근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7,000유로³³⁾에서 8,400유로³⁴⁾로 인상하였으며, 해당 정책을 2023년에도 계

28) Bloomberg Tax, "Greece Gazettes Law Providing R&D Deductions, Tax Incentives for Research Funding," 2022. 8. 11.,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greece-gazettes-law-providing-r-d-deductions-tax-incentives-for-research-funding>, 검색일자: 2022. 8. 22.

29) IBFD, "Greece Introduces New Educational R&D Tax Incentives," 2022. 8.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8-04_gr_2, 검색일자: 2022. 8. 22.

30)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Its Budget Proposal for 2023 With No Big Surprises," 2022. 8.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05_fi_1.html, 검색일자: 2022. 8. 17.

31) 2022년 8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2만원임

32) IBFD,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s_1.9.1.%23gthb_fi_s_1.9.1., 검색일자: 2022. 8. 29.

33) 2022년 8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34만원임

34) 2022년 8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21만원임

속 유지할 계획임³⁵⁾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2020년 제도 도입 시부터 공제비율을 점차 축소하여 2023년부터는 공제되지 않을 계획이었음

- (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파라핀 디젤에 대한 세금감면을 축소하여 세수를 확대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중국 -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차량구치세 면제 연장]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7월 29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신에너지 차량(New Energy Vehicles)에 대한 차량구치세(车辆购置税)³⁶⁾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승인함³⁷⁾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4년 7월 9일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차량구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고³⁸⁾ 2022년 7월 29일 해당 면제정책을 세 번째로 연장함
 - 2017년에 3년간,³⁹⁾ 2020년에 2년간,⁴⁰⁾ 그리고 2022년에 1년간 면제기간을 연장함
 - 차량구치세는 10%의 비례세율을 적용함⁴¹⁾
- 신에너지 차량이란, 순수전기차량(BEV)뿐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V) 및 수소연료 전지차량을 포함함

- 신에너지 차량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음

- 중국은 신에너지 차량 판매 증대를 위해 차량구치세 면제와 더불어 구매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⁴²⁾
 - 2020년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위축된 신에너지 차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장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35)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Promises to Increase Tax Reliefs for Commuting Costs for 2022," 2022. 3.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3-18_fi_1%23tns_2022-03-18_fi_1, 검색일자: 2022. 8. 29.

36) 차량구치세란 중국 국내에서 규정된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목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편」, 2009, p. 278)

37) Tax Notes International, China Extends Tax Exemption For Purchases of New Energy Vehicles(August 8, 2022)

38) IBFD, "Exemption of electric cars from car purchase tax," 2014. 7.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4-07-11_cn_1.html, 검색일자: 2022. 8. 22.

39) IBFD, "Exemption from vehicle purchase tax for new energy vehicles continued," 2017. 12.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29_cn_1.html, 검색일자: 2022. 8. 23.

40) IBFD, "China Extends Vehicle Purchase Tax Exemption for New Energy Cars," 2020. 4.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4-23_cn_1.html, 검색일자: 2022. 8. 23.

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편」, 2009, p. 280.

42)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신에너지차(NEV) 시장 현황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의한 영향」, 2022. 3. 14., p. 3.



[인도네시아 - 코로나19 관련 세금 인센티브 기한 연장]

- 인도네시아 재무부(MoF)는 기존에 연장하였던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의료 관련 세금 인센티브의 적용을 재연장함⁴³⁾
 -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기존 2022년 6월 30일 까지였던 세금 인센티브의 기한을 연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해당 정책에 의해 연장된 세금 인센티브는 적격 납세자에 대한 수입세 징수 면제, 적격 납세자의 월별 법인세 분할 납부액의 50% 감액, 관개(灌溉)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 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의 정부 부담 등을 포함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뉴질랜드 - 부동산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제공]

-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8월 12일, 장기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정 임대용개발사업(build-to-rent developments)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을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함^{44), 45)}

- 이자제한법(interest limitation rules)은 납세자가 투자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납세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해당 대출이자의 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임
- ‘임대용개발(build-to-rent)’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임대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제공해야 함
 -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거주비용 급등에 직면한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이동 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기간은 10년 미만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56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한 채 이상의 건물에 최소 20가구 이상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또한 활발한 신축(new builds) 주택 공급을 위하여 신축 주택의 신규 투자자인 경우 20년간 이자제한법 적용을 면제함
 - 기존 구축된 주거용 부동산의 보유 및 임대 대

43)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Extends Tax Incentives Related to Healthcare, Taxpayers Impacted by COVID-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08_id_1.html, 검색일자: 2022. 8. 22.

44) 뉴질랜드 정부, “Tax incentives to boost long-term rental supply,” 2022. 8. 12., <https://www.beehive.govt.nz/release/tax-incentives-boost-long-term-rental-supply>, 검색일자: 2022. 8. 19.

45) IBFD, “Government to Extend Interest Deduction for Build-to-Rent Developments,” 2022. 8.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17_nz_1.html, 검색일자: 2022. 8. 19.

해서도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되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금번 조치는 8월 말 발표 예정인 옴니버스 조세법안(omnibus tax bill)에 포함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OECD - BEPS Action 5 유해조세환경 검토 경과 공개]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2년 7월 27일, BEPS 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Harmful Tax Practices) 상호검토 경과를 공개함⁴⁶⁾

- 유해조세환경 포럼은 BEPS Action 5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이행과 관련하여 특정 조세제도가 유해조세환경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제도인지 여부를 검토함
 - 2022년 4월, 12개의 조세제도가 최소기준 이행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도출하였고, 결론에 따라 각국은 제도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함
- Action 5의 실질적 활동(substantial activities) 요건 기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연례 평가(상호검토)를 2021년부터 시행하

였고,⁴⁷⁾ 그 중간 결과를 공개한 것임

- 총 319개의 조세제도를 검토하였고, 112개 제도는 폐지되었고 65개 제도는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음
- 최소기준의 경우 각국의 시의적절한 이행은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Action 5의 상호검토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EU - 디지털 시대에서의 부가가치세 연구보고서 발표]

■ 2022년 7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부가가치세 연구보고서를 발표함⁴⁸⁾

- 보고서는 ① 디지털 보고제도(DRR), ② 플랫폼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③ EU 시장 내에서 단일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Import One-Stop Shop(IOSS)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① 디지털 보고제도) 2021년 9월 기준 EU 회원국 중 12개 회원국이 디지털 보고제도를 운영 중이며,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46) OECD, "New results show progress continues in combatting harmful tax practices," <https://www.oecd.org/tax/beps/new-results-show-progress-continues-in-combatting-harmful-tax-practices.htm>, 검색일자: 2022. 8. 18.; OECD, "Harmful Tax Practices – Peer Review Results," <https://www.oecd.org/tax/beps/harmful-tax-practices-peer-review-results-on-preferential-regimes.pdf>, 검색일자: 2022. 8. 18.

4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21-3호)」, 2021, pp. 39~41.

48)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Luchetta, G., Giannotti, E., Dale, S., et al., *VAT in the digital age: executive summary*,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2.



<표 1> 2021년 9월 기준 EU 회원국 디지털 보고제도 운영현황

제도	국가
Clearance E-invoicing	이탈리아
Real-time reporting	스페인, 헝가리
SAF-T reporting	포르투갈, 폴란드, 리투아니아
VAT listing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시행 예정	프랑스, 그리스

출처: European Commission, VAT in the digital age: executive summary, 2022. P.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디지털 보고제도(Digital Reporting Requirement)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의 전자송장 발행의무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자료의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과세당국에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함
 - 정기적 보고: VAT listing, SAF-T 보고제도
 - 지속적 보고: 의무 전자송장제도 및 Real-time 보고제도
- 2021년 9월 기준 12개의 회원국이 디지털 보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와 그리스는 시행 예정임
- EU 회원국의 디지털 보고제도 시행 효과는 약 80억유로로 추산됨⁴⁹⁾
 - 납세자 부담: (-)50억유로, 추가 부가가치세 수입: (+)120억유로, 부가가치세 간소화로 인한 납세자 편의: (+)10억유로

- 동 보고서에서는 EU DRR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② 플랫폼 부가가치세 처리) EU 회원국 간 플랫폼 경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획일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플랫폼 사업자 및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정의 등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

- 플랫폼 경제 분야는 전자상거래, 운송, 숙박, 부동산, 금융, 가사서비스, 광고 부문을 기반으로, 2019년 EU 27개국의 플랫폼 경제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수익은 약 257억유로임⁵⁰⁾
- 플랫폼 제공자, 플랫폼 시설 및 공급장소, 보고 및 기록 유지의무 등 회원국 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처리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획일화되지 않음
- 보고서에서는 EU 차원에서 개입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시하였고, 플랫폼 제공자의 과세 대상 상태 등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정책방향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음⁵¹⁾

■ (③ EU 시장 내 단일 부가가치세 등록 및 IOSS제도) EU 내 미설립법인이 EU 회원국 내에서의 부가가치세 등록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며, 관련하여 OSS제도와 IOSS제도의 개선안이 제시됨⁵²⁾

- EU 내 미설립법인이 EU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

49) 2022년 8월말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조 7,746억원임

50) 2022년 8월말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조 8,603억원임

51) TAX NOTES, New VAT Treatment of Digital Platforms Could Raise Billions, Volume 107, Number 5, August 1, 2022

52) NEWS IBFD,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Reports on VAT As Part of Digital Age Initiativ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7_e2_3.html, 검색일자: 2022. 8. 31.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수입 상품의 장거리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점이 존재함

- OSS제도에서는 B2B 거래를 포함하는 방안이, IOSS제도에서는 현재 150유로의 임계값을 제거하는 방안과 IOSS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효익이 있을 것으로 제시됨

<자료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이사회, 겨울 가스 소비 15% 감축 합의(2022. 7. 20., 7. 26., 8. 5.)¹⁾

● 집행위는 7월 20일 러시아 가스 공급 감축 또는 중단에 대비해 유럽의 가스 사용을 줄이는 법안과 수요 감축 계획을 제안

- 모든 회원국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가스 수요를 지난 5년 평균 소비량 대비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9월 말까지 회원국은 감축 목표에 맞춰 국가 비상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격월마다 진행 현황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급 위기 시 집행위가 연합 경보(Union Alert)를 선언해 회원국에 의무 감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가스 수요 감축 계획을 채택해 회원국 감축 조치의 방향 및 원칙을 제시

- 가능한 경우 가스를 재생가능 연료,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석탄, 석유, 원자력으로서의 전환도 허용

- 에너지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경매, 입찰 제도 등 시장 기반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임시 위기 프레임워크에 따라 회원국의 에너지 전환 지원을 허용
- 냉난방의 감소를 위해 대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및 냉방 절약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

● 에너지 이사회는 에너지 감축안에 대해 26일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추가 의견을 교환한 뒤 8월 5일 공식 합의

- 다른 회원국의 가스망과 연결되지 않거나, 전력망이 유럽 전력 시스템과 동기화되지 않고 전력 생산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높거나, 가스 비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중요 산업이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회원국 등 면제 사례를 설정
- 연합 경보 발령은 집행위의 제안을 받아 이사회회에서 결정토록 함
- 감축 조치를 시행할 때 가계와 의료 및 국방 등 사회 필수 서비스 등 보호 대상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

■ EU 이사회, 러시아 ‘유지 및 조정(maintenance and alignment)’ 제재 패키지 발표(2022. 7. 21.)²⁾

1) EU 집행위, Save Gas for a Safe Winter: Commission proposes gas demand reduction plan to prepare EU for supply cuts, 2022. 7. 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4608, 검색일자: 2022. 8. 23.; EU 이사회, Member states commit to reducing gas demand by 15% next winter, 2022. 7. 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26/member-states-commit-to-reducing-gas-demand-by-15-next-winter/>, 검색일자: 2022. 8. 23.; EU 이사회, Council adopts regulation on reducing gas demand by 15% this winter, 2022. 8. 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8/05/council-adopts-regulation-on-reducing-gas-demand-by-15-this-winter/>, 검색일자: 2022. 8. 23.

2) EU 이사회,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dopts "maintenance and alignment" package, 2022. 7.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21/russia-s-aggression-against-ukraine-eu-adopts-maintenance-and-alignment-package/>, 검색일자: 2022. 8. 22.; _____, Question and Answers: "maintenance and alignment"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2022. 7. 2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4643, 검색일자: 2022. 8. 22.

- EU는 G7 등 동맹 및 협력국의 제재에 맞춰 조정 (align)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추가 제재를 채택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금의 직·간접적 구매, 수입, 이전을 금지
 - 단,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러시아와 제3국 간의 농산물 및 식품 무역은 제한하지 않음
-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 인상(2022. 7. 21.)³⁾
- ECB 정책 위원회는 7월 27일부로 정책금리(기준금리 0.0%, 한계대출금리 0.25%, 수신금리 -0.50%)를 각각 0.5%p씩 인상하기로 결정
 - 이는 2011년 7월⁴⁾ 이후 11년 만의 인상임
 - 지난 회의⁵⁾에서 0.25%p 인상을 사전 안내했으나, 인플레이션 위험 평가를 갱신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짐으로써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보폭을 더 넓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이 6월 8.6%로 더 상승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의 여러 지표들도 더 상승했으며,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바람직하지 않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정상화가 적절하되 구체적인 정책금리 경로는 매 회의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언급
 -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 원금을 충분한 유동성 조건과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때까지 재투자하고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의 원금도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
 - 통화정책 기조가 유로지역의 모든 국가에 원활하게 파급되기 위해 파급경로보호수단(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을 신규 도입
 -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부적절하고 무질서한 시장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시될 수 있음
 -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 기초여건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융 조건의 악화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발행된 채권을 유통 시장에서 매입
 - * EU 재정프레임워크 준수,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imbalances) 부재, 재정 지속가능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정책 등
 - 구체적인 매입 규모는 위협의 심각도에 따라 결정

3)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 7. 21.,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721~53e5bdd317.en.html>, 검색일자: 2022. 8. 22.; _____, The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2022. 7. 21.,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pr220721~973e6e7273.en.html>, 검색일자: 2022. 8. 22.

4)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2. 6. 20.

5)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2022를 참고 바람



IMF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2022. 7. 26.)⁶⁾

- 세계 경제는 2021년 잠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하방 리스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2022년 3.2%, 2023년은 2.9% 성장할 전망(4월 전망 대비 -0.4%p, -0.7%p)
 -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 성장둔화, 전쟁 및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4월 전망 대비 선진국은 -0.8%p,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0.2%p 하향 조정됨
 - (선진국) 미국은 강력한 통화 긴축 및 구매력 하락으로 4월 전망 대비 -1.4%p 하향 조정,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대폭 하향 조정됨
 - (신흥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하향 조정, 인도는 대외여건 악화 및 빠른 긴축정책으로 하향 조정
- (인플레이션) 2021년부터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선진국 6.6%(4월 전망 대비 +0.9%p), 신흥시장 및 개도국 9.5%(4월 전망 대비 +0.8%p), 2023년은 선진국 3.3%(4월 전망 대비 +0.8%p), 신흥시장 및 개도국 7.4%(4월 전망 대비 +0.9%p)을 기록할 전망

- 미국(2022년 6월, 9.1%)과 영국(2022년 5월, 9.1%)은 40년 만에 최대, 유로존(2022년 5월, 8.1%)도 통합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위험) 고물가, 물가대응 과정에서의 부정적 파급효과, 전쟁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계 생계비 부담 증가, 임금상승 압력, 주요국 긴축에 따른 신흥국 부채부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부동산 위기에 의한 성장 억제, 지정학적 분열에 따른 세계 경제 분열 등 상존
- (정책권고) 정책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두되, 국가별 물가 상승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정책 필요
 -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시적인 선별지원 등 추진
 - (금융정책) 거시건전성 수단 강화, 외화 의존도 완화, 대외충격을 환율로 흡수하기 힘든 경우 외환 개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고려
 - (국제협력) 식품·에너지 관련 수출 무역장벽 제거, 글로벌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보급 노력 강화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07/26/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2>, 검색일자: 2022. 7. 28.

<표 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실적	전망		'22년 4월 전망 ¹⁾ 대비 차이	
	2021	2022	2023	2022	2023
세계 경제	6.1	3.2	2.9	-0.4	-0.7
선진국	5.2	2.5	1.4	-0.8	-1.0
미국	5.7	2.3	1.0	-1.4	-1.3
유로지역	5.4	2.6	1.2	-0.2	-1.1
독일	2.9	1.2	0.8	-0.9	-1.9
프랑스	6.8	2.3	1.0	-0.6	-0.4
이탈리아	6.6	3.0	0.7	0.7	-1.0
스페인	5.1	4.0	2.0	-0.8	-1.3
일본	1.7	1.7	1.7	-0.7	-0.6
영국	7.4	3.2	0.5	-0.5	-0.7
캐나다	4.5	3.4	1.8	-0.5	-1.0
한국	4.0	2.3	2.1	-0.2	-0.8
신흥개도국	6.8	3.6	3.9	-0.2	-0.5
아시아 신흥개도국	7.3	4.6	5.0	-0.8	-0.6
중국	8.1	3.3	4.6	-1.1	-0.5
유럽 신흥개도국	6.7	-1.4	0.9	1.5	-0.4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6.9	3.0	2.0	0.5	-0.5
중동 및 중앙 아시아	5.8	4.8	3.5	0.2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6	3.8	4.0	0.0	0.0
저소득 개도국	4.5	5.0	5.2	0.4	-0.2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 ²⁾					
선진국	9.1	5.3	3.2	-0.3	-1.4
신흥개도국	11.7	2.2	3.3	-1.8	-0.9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³⁾	67.3	50.4	-12.3	-4.3	1.0
비연료	26.1	10.1	-3.5	-1.3	-1.0
소비자 물가					
선진국 ⁴⁾	3.1	6.6	3.3	0.9	0.8
신흥개도국 ⁵⁾	5.9	9.5	7.3	0.8	0.8

주: 실질실효환율은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27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2022

2) 수·출입량 증가율의 단순 평균

3) 영국 브렌트, 두바이 파테,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의 단순 평균. 2021년 평균 가격은 배럴당 69.07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추정 가격은 2022년 103.88달러, 2023년은 91.07달러

4)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은 각각 7.3%, 3.9%(유로지역), 1.9%, 1.3%(일본), 7.7%, 3.0%(미국)

5)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2, 2022, Table 1을 편집

한국 자료는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2/Update/July/English/data/WEOJuly2022update.aspx>



으며, 이는 주로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¹⁰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OECD, 2022년 1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2. 8. 4.)⁷⁾

- OECD 회원국의 2022년 1분기 1인당 실질가계 소득(real household income per capita)⁸⁾은 전 분기 대비 1.1% 하락하고 2019년 4분기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2022년 1분기 1인당 실질GDP가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한 것과 대조됨
 - 1인당 GDP 성장률의 추이는 지난 4분기 연속으로 팬데믹 초기 급격한 하락이후 경제 활동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21년 초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가계에 대한 지원의 감소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 G7 국가⁹⁾ 중 2022년 1분기 1인당 실질가계 소득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국가는 프랑스 -1.9%, 독일 -1.7%로 나타났으며, 그 외 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및 스페인의 실질가계소득은 각각 -5.5% -4.1%를 기록하며 감소함
 - 2022년 1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로 1.5%를 기록하였

■ OECD,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의 위기(Th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endangered by Russia's war on Ukraine) 보고서를 발표(2022. 8. 4.)¹¹⁾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이에 영향을 받는 OECD 국가들은 주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 (현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점유율이 높은 주요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세계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공급의 차질로 특정 농산물의 가격을 상승하게 하여 일부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키고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알루미늄, 니켈, 팔라듐 및 바나듐 등)의 차질은 현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에너지 전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전 세계 원자재 생산량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알루미늄(Aluminium) 5.5%, 니켈

7)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irst quarter 2022," 2022. 8. 4., <https://www.oecd.org/newsroom/growth-and-economic-well-being-first-quarter-2022-oecd.htm>, 검색일자: 2022. 8. 24.

8) 가계의 총가처분소득(gross 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s)을 의미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한 후 가구가 받는 총소득으로 금전적 사회적 혜택(실업수당, 연금)을 포함함.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적고 정부가 무료로 지급하는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현물 이전지출은 포함하지 않음

9)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으로 비교

10) 고용주가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 급여, 사회보장기여금(employees' wages and salaries and social contributions)을 의미

11) OECD, "Th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endangered by Russia's war on Ukraine," 2022. 8. 4., <https://www.oecd.org/ukraine-hub/policy-responses/the-supply-of-critical-raw-materials-endangered-by-russia-s-war-on-ukraine-e01ac7be/>, 검색일자: 2022. 8. 23.

(Nickel) 11%, 팔라듐(Palladium) 43%, 바나듐(Vanadium) 21%, 칼륨(Potash) 18%로 나타남

- (권고사항) 원자재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제한에 대한 재협약 및 규율 등이 필요
 - 원자재 가용성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제약, 수출 제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수출 제한은 글로벌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여 국제시장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자간 또는 지역적인 차원, 양자 간 차원에서 기존의 무역정책 조치와 수출제한에 대한 협약 및 새로운 규율이 필요

■ OECD,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The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on agricultural markets) 보고서를 발표(2022. 8. 5.)¹²⁾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에 물류를 지원하고,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중기 조치가 필요
- (현황)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우

크라이나 곡물 생산 및 수출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해바라기 씨 생산국으로 밀, 유채, 보리, 식물성 기름,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이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자 보리와 해바라기 씨의 중요한 수출국임
- 러시아의 경우 작물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권고사항)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특히 식량과 비료)이 가능하도록 물류지원이 요구되며, 중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가 고려되어야 함
 - (국제무역)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출 촉진을 위해 흑해 항구 사용가능 조치, 대체 경로를 통한 수출 등의 단기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공급) 2022년 6월 기준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43억달러로 추산되며, OECD는 손실된 자산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고 있음
 - (수요) 농산물의 비식품 용도(사료 및 연료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1인당 동물성 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등 식이변화를 촉진하는 노력 등이 필요

12) OECD, "The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on agricultural markets," 2022. 8. 5., <https://www.oecd.org/ukraine-hub/policy-responses/the-impacts-and-policy-implications-of-russia-s-aggression-against-ukraine-on-agricultural-markets-0030a4cd/>, 검색일자: 2022. 8. 23.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예산처(CBO), 장기재정 전망(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보고서 발표(2022. 7. 27.)^{13), 14)}

- (재정수지) FY2022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4% 추정 → FY2052 재정적자는 약 11% 전망 (FY2022 대비 약 3배 증가)
 - FY2022 재정적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대응 지출이 약해(wane)지고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20~2021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이자 지출 증가에 기인하여 상승 전망
- (연방채무) FY2022 연방 채무¹⁵⁾는 GDP 대비 98% → FY2023은 96% 전망
 - 연방 채무는 2023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2052년에는 185%를 기록하면서 미 역사상 최고인 2차 세계대전 직후 수치(1946년: 106%) 대비 큰 폭으로 상승 전망
- (지출전망¹⁶⁾) FY2022 GDP 대비 총재정지출은 전년(30.5%) 대비 7%p 감소한 23.5% 전망
 - * GDP 대비 총지출 전망: 2032년 24.3% → 2052년 30%
 - (재량지출) GDP 대비 수치는 2021년에

- 7.3%(실적) 기록 후, 올해('22) 7.0%로 하락 → 2036년에 6.0%까지 하락한 후 남은 전망기간(~2052년) 동안 6.0%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의무지출) FY2022 GDP 대비 의무지출은 전년(21.6%) 대비 6.7%p 감소한 14.9% 전망
 - 의무지출 증가는 주요 구성 항목인 사회보장지출과 대규모 보건 프로그램의 증가가 주요 요인
- (수입 전망) FY2022 GDP 대비 재정수입은 전년(18.1%) 대비 1.5%p 증가한 19.6% 전망
 - 2023~2025년 구간에서 개인소득세 증가 요인(팬데믹 이후 효과)이 사라지면서 GDP 대비 수입은 감소하나, 2026~2027년에는 세금감면 정책의 만료로 재상승 전망
- (경제) 향후 30년간의 실질성장률(real potential GDP) 평균 전망치는 1.7%로 지난 30년간(1992~2021)의 성장률(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
 -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규모는 2052년까지 연평균 0.4% 증가를 전망(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 비농업(non-farm business) 부문 총요소생산성은 전망 기간(~2052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1.1% 전망(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 연방채무 이자율(명목)은 같은 기간(~2052년) 동안 연평균 3.3% 전망(지난 30년간의 연평

13) CBO, "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2022. 7. 27., <https://www.cbo.gov/publication/57971>, 검색일자: 2022. 7. 28.

14) CRFB, "Analysis of CBO's July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2022. 7. 27., <https://www.crfb.org/papers/analysis-cbos-july-2022-long-term-budget-outlook>, 2022. 8. 19.

15) debt held by the public

16) 시기별 GDP 대비 총지출 평균: 1972~2021년 21% → 2022~2052년 26%

균은 4.2%)

■ 의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 H.R. 5376) 가결(2022. 8. 7.)¹⁷⁾

- (정책 규모) 지출 총규모 4,370억달러의 정책으로 사회 안전망, 기후변화 대응, 보건 정책(처방약가 인하 등), 최저법인세율 신설 등 포함
 - 보건 정책으로 인한 지출 절감분(2,650억달러) 및 세입 정책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4,720억달러) 등 동 정책으로 발생하는 총수입은 7,370억달러 추정
 -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순적자(net deficit) 감축 규모는 약 3천억달러 전망

- (주요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

- ①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및 조세 감면, ② 건강보험(ACA) 지원 및 백신 정책 등이 포함된 보건 지출, ③ 지출 절감을 위한 보건 정책, ④ 수입 강화 조치(최저법인세율 15% 및 국세청의 세금집행 강화 지원)으로 구성

- (정책 관련 이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특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의 경우 최대 4천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한국산 및 유럽산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미 양국 간 주요 이슈로 언급되어지고 있음¹⁸⁾

<표 2> 경제전망 비교(MSR vs CBO vs FOMC)

(단위: 십억달러, %)

구분(CY ¹⁾)		2019	2020	2021	2022	2023	...	2032
		실적			전망			
실질GDP성장률 ²⁾	MSR(정부)	2.3	-2.4	5.5	1.4	1.8	...	2.3
	CBO(의회)				3.1	2.2	...	1.7
	FOMC(연준)				1.7	1.7	...	1.8
CPI(Urban) ³⁾	MSR(정부)	2.0	1.2	6.7	6.6	2.8	...	2.3
	CBO(의회)				4.7	2.7	...	2.3
	FOMC(연준)				5.2	2.6	...	2.0
실업률 ¹⁾	MSR(정부)	3.7	8.1	5.4	3.7	3.7	...	3.8
	CBO(의회)				3.8	3.5	...	4.5
	FOMC(연준)				3.7	3.9	...	4.0

주: 1. 실질성장률, CPI, 항목은 전년도 4분기 대비(Fourth quarter over Fourth quarter) 수치

2. 전망 기준 일자: (MSR: 2022. 6.) / (CBO: 2022. 7.) / (FOMC: 2022. 6. 16.)

1) CY = Calendar Year

2) Chain(2012) Dollars

3) 계절 조정된 도시소비자 물가 지수

출처: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MSR, 2022. 8. 23., Table 2.

17) 의회 상원 민주당 홈페이지, "SUMMA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2022. 8. 11.,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inflation_reduction_act_one_page_summary.pdf, 검색일자: 2022. 8. 17.

18) 백악관, "BY THE NUMBER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8. 15., 검색일자: 2022. 8. 29.(관련 링크: VOA, <https://www.voakorea.com/a/6717447.html>, 검색일자: 2022. 8. 29.)



- 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전망(MSR; Mid-Session Review) 발표(2022. 8. 23.)¹⁹⁾
 - (재정수지) 올해(FY2022) 재정적자는 3월에 발표된 본 예산안 전망 수치 1조 4,150억달러 대비 3,830억달러 감소한 1조 320억달러 추정
 - (수입) FY2022 총수입은 3월 추정치(4조 4,437억달러) 대비 11.4%(5,040억달러) 상향 조정된 4조 9,410억달러(GDP 대비 20.0%) 추정
 - (지출) FY2022 총재정지출은 3월 추정치(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2.1%(1,200억달러) 상향 조정된 5조 9,720억달러(GDP 대비 24.2%) 계획
 - (경제전망) 올해('22년) 4분기 실질성장률은 전년 동기(5.5%) 대비 3.7%p 하락한 1.4%로 전망되며, 내년('23년)에는 소폭 상승한 1.8% 전망
 - 올해('22년) 실업률은 전년(5.4%) 대비 개선된 3.7%로 전망되며, 이후 장기적으로는 3.8%를 유지할 전망(<표 2>참조)

[기타]

- 반도체 지원 법안(CHIPS and Science Act; H.R. 4346), 대통령의 법안 서명 후 입법(P.L. 117-167) 발효(2022. 8. 9.)²⁰⁾

- (법안 목표) 총지출 규모 542억달러를 통해 수만 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투자 및 제조업 활성화, 민간 투자 활성화 촉매제 역할,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²¹⁾
- (주요 정책)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연구개발(R&D), 인력개발에 527억달러 지원
 - 제조 관련 인센티브 390억달러, R&D 및 인력 개발 132억달러, 추가적으로 반도체 제조 및 관련 장비 비용에 대해 25% 세액 공제
 - 반도체 지원 항목과는 별개로 대법원 안보 위협에 대응한 추정 예산(1,940만달러)이 포함되어 있음
- (정책 관련 이슈²²⁾)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액 공제 지원을 규정하면서 수혜 요건으로 투자 기업들의 중국 및 특정 지역에서의 신규 생산시설 증설 제한(10년)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주요 현안으로 언론에 언급되고 있음²³⁾

- 미 상무부(BEA), 2022년 2분기 GDP(속보, 수정

19) OMB, FY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Mid-Session Review, 2022. 8. 23.,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8/msr_fy2023.pdf, 검색일자: 2021. 8. 25.

20) OMB, FY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Mid-Session Review, 2022. 8. 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2/08/09/bills-signed-h-r-4346/>, 검색일자: 2022. 8. 16.

21) 백악관,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2022. 8. 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09/fact-sheet-chips-and-science-act-will-lower-costs-create-jobs-strengthen-supply-chains-and-counter-china/>, 검색일자: 2022. 8. 17.

22) 주한미국대사관,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2022. 8. 10., <https://kr.usembassy.gov/081022-fact-sheet-chips/>, 검색일자: 2022. 8. 30.

23) BusinessKOREA,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Concerned for Chips and Science Act, 2022. 8. 26.,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82>, 검색일자: 2022. 8. 28.

[그림 1] 실질 GDP 추이

(단위: 전 분기 대비 % 변화, 계절조정, 연율)



출처: BEA, *Gross Domestic Product(Second Estimate), Corporate Profits(Preliminary Estimate), Second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 8. 25.

치) 발표(2022. 8. 25.)²⁴⁾

- 2022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0.6%(연율, 수정치)로 2022년 1분기(-1.6%)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됨
 - 속보치는 -0.9%로 수정치에는 소비 지출과 민간 재고투자의 수정 사항이 반영됨
 - 전 분기와 비교해 고정 투자(1.28→-0.84, 이하 기여도), 주거(0.02→-0.83) 등의 기여도가 감소했지만, 운송 서비스(-0.05→0.17), 수출(-0.55→1.88) 등의 기여도가 높아짐
 - 명목 GDP 성장률은 8.4%로 2022년 1분기 성장률(6.6%)보다 증가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2022. 8. 10.)²⁵⁾

-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CPI-U)이 전년 동월 대비 8.5%로 집계됨
 -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9.1%)에 비해 소폭 하락했고,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0.0%를 기록해, 7월 물가는 6월 물가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음
- 대부분 항목의 항목별 물가가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볼 때, 가솔린(-7.6%), 증유(-11.0%) 등 에너지 항목의 물가는 하락

24) BEA,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 7. 28.,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second-quarter-2022-advance-estimate>, 검색일자: 2022. 8. 25.; _____, *Gross Domestic Product(Second Estimate), Corporate Profits(Preliminary Estimate), Second Quarter 2022*, 2022. 8. 25.,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second-estimate-and-corporate-profits-preliminary-second-quarter>, 검색일자: 2022. 8. 25.

25)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June 2022*, 2022. 7. 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 7. 19.; 백악관, *President Biden Statement on CPI Inflation in June*, 2022. 7. 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7/13/president-biden-statement-on-cpi-inflation-in-june/>, 검색일자: 2022. 7. 19.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그 외의 대부분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 폭이 작아 전반적으로 전월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났음

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

- (②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신경제·재정재생 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
- (③ 의무적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고, 의무적 경비를 삭감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재량적 경비로 요구 가능
- (④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경비) 기존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해 부흥 필요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함
- (⑤ 그 외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요구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²⁶ 2023(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 개산²⁷⁾ 요구 기본방침²⁸⁾ 발표(2022. 7. 29.)²⁹⁾

- 2023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³⁰⁾를 강조하는 “2022년 기본방침” 및 그린,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저출산 대책을 미래 개척 원동력으로 삼은 “2021년 기본방침”에 따른 경제·재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
- 개산요구 제출 기한은 8월 말까지이며, 구체적인 개산요구 기준(예산 편성 지침)은 아래와 같음
 - (① 연금·의료 관련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5,600억엔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중요 정책 추진범위’로 설정하고, 각 성장관은 ‘의무적 경비가 전년도 액수 미만인 경우 차액(그림 2의 B)’ 및 ‘재량적 경비 삭감액(그림 2의 A)’에 대해 각각 3배 금액 범위 내에서 중요 정책 추진범위 정책에 요망³¹⁾하도록 함
- ‘중요 정책 추진범위’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인적투자, 과학기술·혁신 및 스타트업, 그린, 디지털에 관한 투자와 함께 에너지·식량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 국가 안보 확보 등이 해당됨

26) Fiscal Year 회계연도. 일본의 예산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산정함

27) 어렵잡아 한 계산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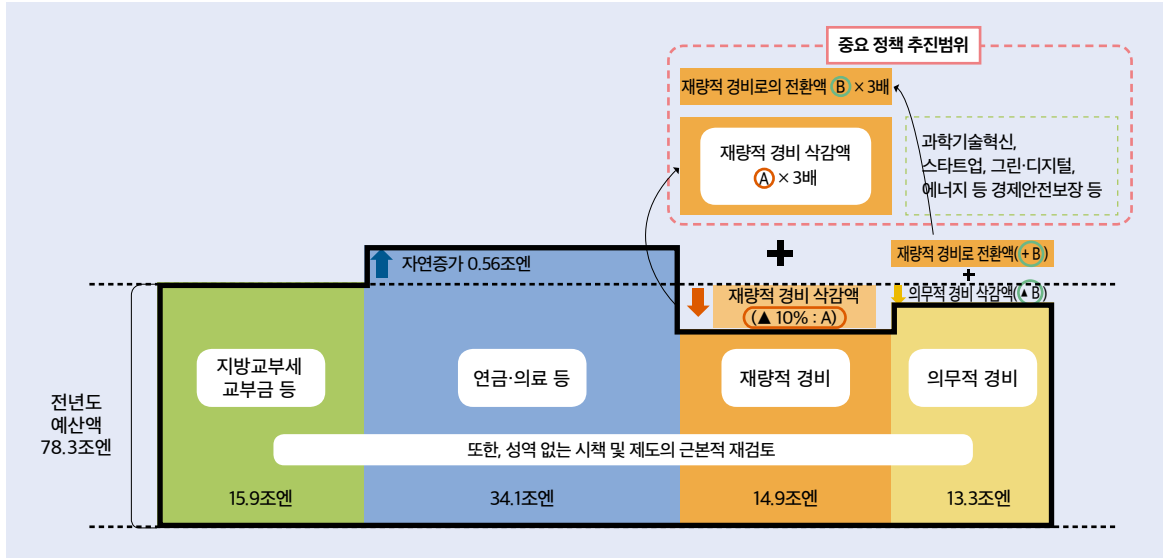
28) 국가의 예산편성에 앞서 각 부처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개략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문서(개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무성에 제출하는 것을 개산요구라고 하며, 개산요구 기준에서는 각 부처 개산요구 전에 예산편성의 방침 및 상한액을 명시

29)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2. 7.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html, 검색일자: 2022. 8. 4.

30) ① 성장전략, ② 분배전략, ③ 포용적 사회 실현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성장전략은 과학기술혁신, 디지털전원 도시국가 구상 등 지방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경제안보 정책이 있으며, 분배 전략으로는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임금 인상, 인적 투자 강화, 차세대 중산층의 유지가 있고,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 경제활동 참가 및 여성 참여 증대, 고독·고립 대책,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소비자 보호로 구성되어 있음

31) 요구금액은 각 성이 재정당국인 재무성에 요청할 수 있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0% 상한을 의미하고, 요망금액은 요구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운 우선 추진과제인 ‘중요 정책 추진범위’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

[그림 2] 2023년 예산 개산요구에 대한 기본방침



주: 1. 상기 전년도 예산액은 코로나 예비비를 제외한 것. 코로나 예비비를 포함한 전년도 예산 총액은 83.3조원, 의무적 경비는 18.3조원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하고, 의무적 경비는 내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 변화 가감산
 출처: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2. 7.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220729a.pdf, 검색일자: 2022. 8. 4.

- (예산편성 과정의 검토사항)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각 경비 간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으로 필요 요구에 대처하도록 함

※ (목적) 본 전망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고자 함

- (시나리오별 가정) 2023년도까지의 경제동향은 내각부 수정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하며, 2024년도 이후는 과거 실적 및 현재 경제동향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GDP 및 물가 동향 등의 중장기적 거시경제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교³²⁾
- (중장기 경제전망)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재생을 가정한 성장실현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실질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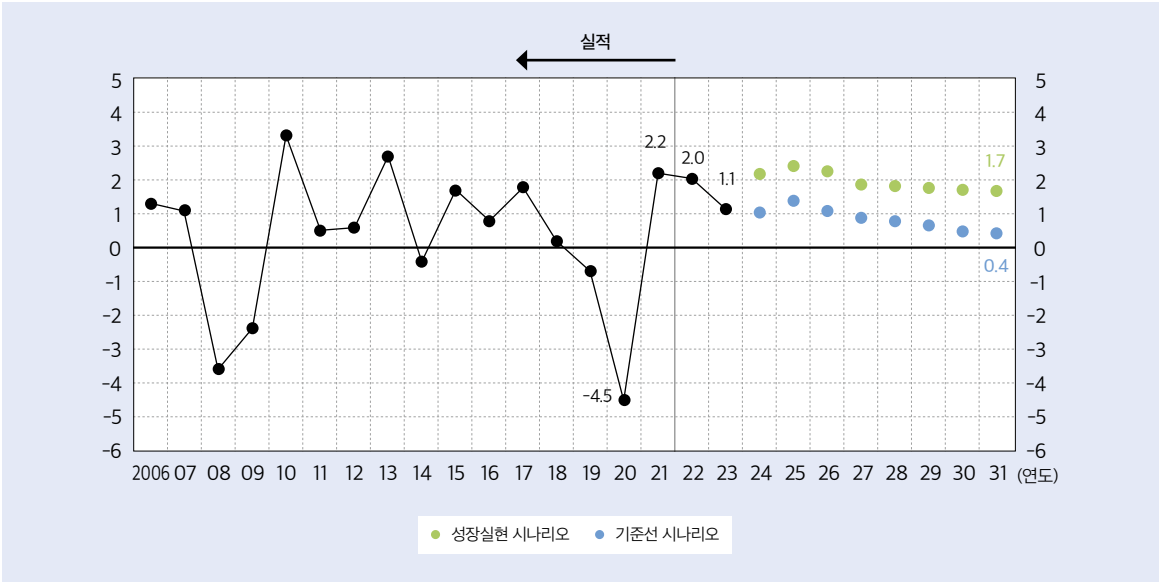
■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2022. 7. 29.)³²⁾

32)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4年7月29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2. 7. 29.,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html>, 검색일자: 2022. 8. 5.
 33) • (성장실현 시나리오)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재생 목표를 과거 실적수준으로 실현하는 경우(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기 이전 실제 경험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속도로 증가 등을 가정(현재 약 0.5%수준에서 약 1.4%까지 상승)
 • (기준선 시나리오) 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향후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 약 0.6% 가정 등)



[그림 3]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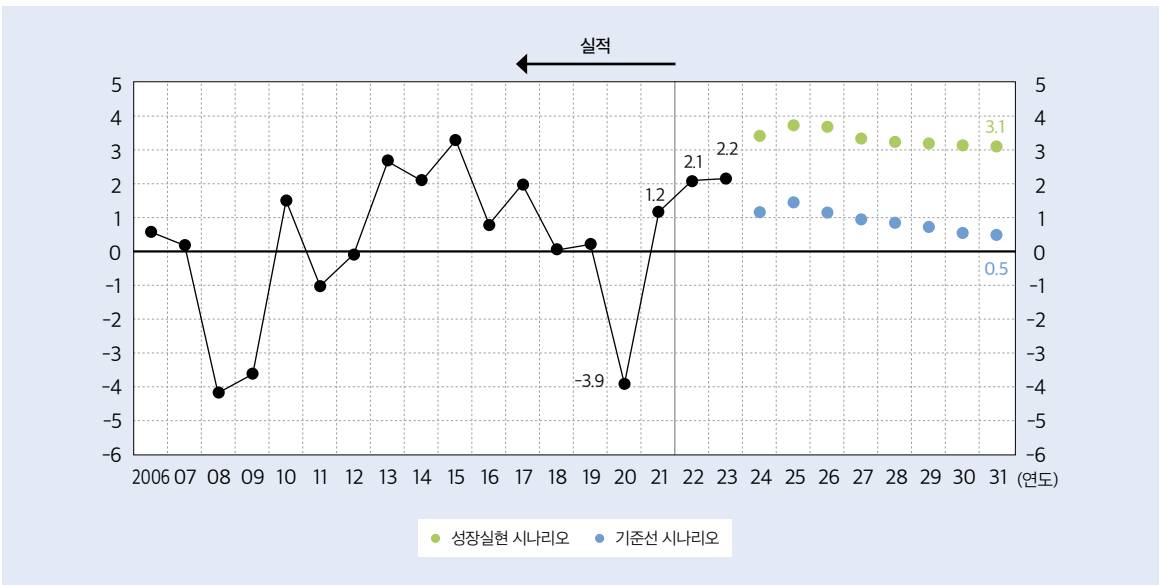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4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2. 7. 29.,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y/r4chuuchouki7.pdf>, 검색일자: 2022. 8. 5., p. 4

[그림 4] 명목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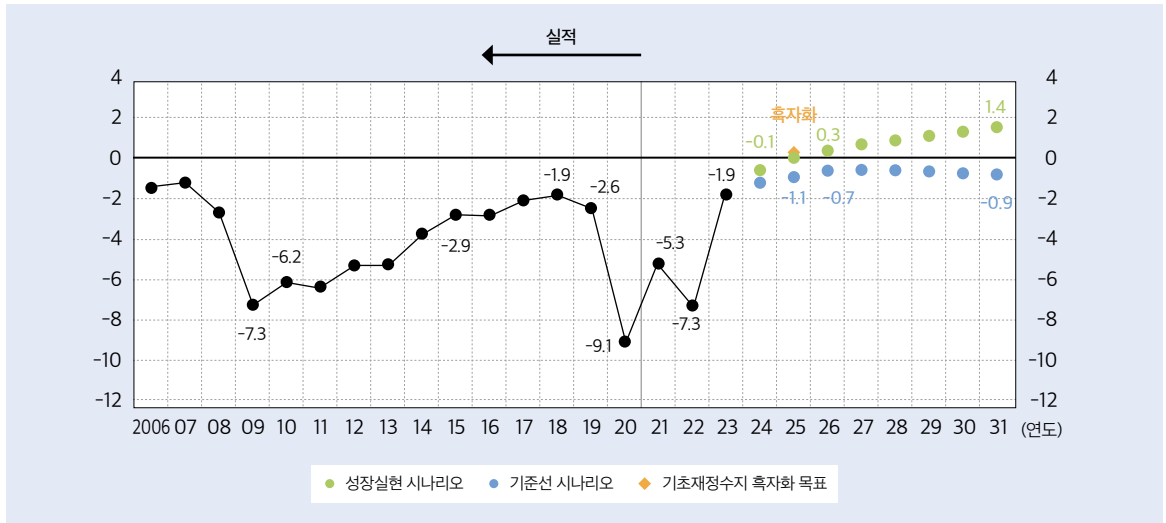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4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2. 7. 29.,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y/r4chuuchouki7.pdf>, 검색일자: 2022. 8. 5., p. 4

[그림 5]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단위: %)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4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2. 7. 29.,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4chuuchouki7.pdf>, 검색일자: 2022. 8. 5., p. 6

2%, 명목 3%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2025년에 명목 GDP 600조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이후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그림 3], [그림 4] 참조)

-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을 가정하는 기준선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실질·명목 모두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 전망
- (중장기 재정전망) 성장실현 케이스 기준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 GDP 대비 -0.1%, 2026년에 흑자 전환 전망되며, GDP 대비 공채 잔액 비율은 예산기간 내에 감소가 예상됨([그림 5] 참조)
- 기준선 시나리오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는 2025년 -1.1% 수준으로 전망기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고, GDP 대비 공채 잔액비율은 전망기간 후반에 상승함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2. 7. 21.)³⁴⁾

- (경제)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 하방압력이 있으나 코로나19 및 공급 제약의 영향 완화로 점차 경제회복 전망
- 실질 GDP는 2022년 2.4%, 2023년 2.0%, 2024년 1.3% 전망
- (물가) 에너지, 식료품, 내구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상승률은 증가할 전망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34)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 2022年7月」, 2022. 7. 2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07a.pdf>, 검색일자: 2022. 8. 5.



- 기여가 감소하여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2.3%, 2023년 1.4%, 2024년 1.3%로 전망
- (위험) 대내외 코로나19 감염병 영향과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 에너지 가격 및 해외 경제·물가 동향 변화 등으로 일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음
- 금융·환율 시장 동향과 경제·물가 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전망은 당분간 하방 리스크가 있으나, 그 후는 대체로 상·하방 밸런스를 유지하고, 물가 전망은 상방 리스크가 크지만 이후 밸런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계획과 2026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승인함
- 연방 정부는 에너지 기후 기금(EKF)을 기후변화기금(KTF)으로 발전^{36), 37)}시켰으며 이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예정
- 기후변화 기금은 환경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에너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기후를 보호하는데 자금을 제공
- 2023년에만 354억유로를 사용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총 1,77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주요 항목은 건축 부문 연방기금 지원(BEG), 충전 인프라 확장을 포함한 E-모빌리티 추가 투자, 수소 산업의 발전, 에너지 효율 촉진 등
- 특별 기금은 국가 배출권 거래 및 탄소 가격 책정의 수입과 적립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연방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독일

- 연방 정부, 1,700억유로 규모의 기후변화기금(Klima-und Transformationsfonds) 계획 승인 (2022. 7. 27.)³⁵⁾
- 연방 내각은 기후변화 기금에 대한 2023년 재정

- 연방 경제기후부, 10월부터 한시적 가스 부과금 제도 도입(2022. 8. 4.)^{38), 39), 40)} 및 연방 정부, 가

35) 연방 정부, 2022. 7. 27., "170 Milliarden Euro für Energieversorgung und Klimaschutz,"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klima-und-transformationsfonds-2065714>, 검색일자: 2022. 8. 9.

36) 기후변화기금(KTF)으로의 명칭 변경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기금이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라 기후보호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출"에 사용 목적이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함(Das Parlament, "Neuer Name, neue Ziele," 2022. 5. 16., https://www.das-parlament.de/2022/20/wirtschaft_und_finanzen/895298-895298, 검색일자: 2022. 8. 29.)

37) 연방 법, 특별기금 "기후변화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gesetze-im-internet.de/ekfg/BJNR180700010.html>, 검색일자: 2022. 8. 29.

38) 연방 경제기후부, "Bundeskabinett verabschiedet zeitlich befristete Gas-Umlage für sichere Wärmeversorgung im Herbst und Winter," 2022. 8. 4.,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8/20220804-bundeskabinett-verabschiedet-zeitlich-befristete-gas-umlage-fur-sichere-waermeversorgung-im-herbst-und-winter.html>, 검색일자: 2022. 8. 17.

39) 연방 경제기후부, "Verordnung über zeitlich befristete Gas-Umlage für sichere Wärmeversorgung im Herbst und Winter tritt in Kraft," 2022. 8. 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8/20220809-verordnung-ueber-zeitlich-befristete-gas-umlage-fuer-sichere-waermeversorgung-tritt-in-kraft.html>, 검색일자: 2022. 8. 17.

40) 연방 경제기후부, Sicherung der Energie- und Wärmeversorgung: Höhe der Gas-Umlage steht fest - Bundesminister Habeck: "Die Umlage muss und wird mit gezielten Entlastungen einhergehen," 2022. 8. 1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8/20220815-sicherung-der-energie-und-waermeversorgung.html>, 검색일자: 2022. 8. 17.

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계획 발표(2022. 8. 18)⁴¹⁾

- 연방 내각은 겨울철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보안법 26조⁴²⁾에 근거하여 가스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킴
 - 천연가스 수입 비용의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가스공급업체들을 지원하여 가스 공급의 부실과 실패를 방지하며 시민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보안을 유지
 -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 추가 부담금은 1kwh당 2.419유로센트로(2022년 8월 15일 기준), 독일 가스시장 운영기업인 THE (Trading Hub Europe GmbH)가 실제 비용을 바탕으로 조례에 명시된 방법으로 계산하여 3개월마다 업데이트 할 수 있음
- 연방 정부는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천연가스 판매세를 19%에서 7%로 일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
 - 140억유로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가스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부담을 덜게 됨
 - 기간은 가스 부담금 시행기간과 같음(2022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 연방 재무부, 인플레이션 보상법 초안 발표(2022. 8. 10.)⁴³⁾

- 연방 재무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보상법을 제정하고자 함
 - 소득세 과표구간 업데이트, 아동수당 인상, 기본공제액 인상 등의 지원을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인상으로 과표구간이 높아져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을 방지
 -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기본공제액)을 2022년 1만 347유로에서 2023년 1만 632유로, 2024년에는 1만 932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연간 소득 하한선도 2022년 5만 8,597유로에서 2023년 6만 1,972유로, 2024년 6만 3,515유로로 인상할 계획
 - 국민 약 4,800만명이 1인당 평균 192유로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연방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는 101억유로, 2024년에는 175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족 지원) 소득세 자녀공제액(Kinderfreibetrag)에 대하여 현행 부모당 각각 2,730유로인 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4년까지

41) 연방 정부, “Mehrwertsteuer auf Gas wird gesenkt,” 2022. 8. 1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gasumlage-mehrwertsteuer-2075248>, 검색일자: 2022. 8. 25.

42) “연방정부는 ‘균형가격 조정’ 조항을 통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금으로 가격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켜 모든 가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7월호, “연방 정부, 에너지 보안법(EnSiG) 추가 개정(2022. 7. 8.)” 참고)

43) 연방 재무부, “Eckpunkte für ein Inflationsausgleichsgesetz,” 2022. 8.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inflationsausgleichsgesetz.html>, 검색일자: 2022. 8. 17.



- 2,994유로로 소득세를 감면할 계획
- 아동수당(Kindergeld)도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첫째, 둘째, 셋째는 1명당 매달 233유로, 넷째부터는 1명당 매달 250유로씩 지급할 계획
- (기본공제액 인상) 2022년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9,984유로에서 1만 347유로로 인상

- 국회는 2022년 7월 제출한 2021년 결산법안을 최종 부결함
- 법안부결은 2022년과 2023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국회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지출 수준을 비판함
- 2021년 프랑스 정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와 전쟁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 및 프랑스 회복 계획을 실시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기업 및 가계에 재정지원
- 프랑스의 경제활동은 2021년에 강력하게 반등하여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69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임
- 2021년에는 85만개 이상의 급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이 2021년 4분기에는 7.4%까지 하락하여 2008년 이후 최저 수준 기록
- 공공 적자는 2020년 GDP의 8.9%에서 2021년



프랑스

[예산·결산 등]

■ 국회, 2021 결산법안(PLR : 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2021) 최종 부결(2022. 8. 3.)^{44), 45)}

<표 3> FY2021 결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0 (A)	2021 본예산 (B)	2021 2차수정예산 (C)	2021 결산 (D)	(D-A)	(D-B)	(D-C)
재정지출(Depenses BG + PSR)	443.4	455.5	499.8	488.5	45.1	33.0	-11.3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56.0	257.9	277.6	295.7	39.8	37.9	18.2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8	25.3	22.4	21.3	6.5	-4.1	-1.1
특별회계(Solde comptes spéciaux)	-5.4	-0.9	-5.1	0.8	6.2	1.7	5.9
부속예산(Solde budget annexes)	0.0	0.0	-0.1	0.0	0.0	0.0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178.1	-173.3	-205.1	-170.7	7.3	2.6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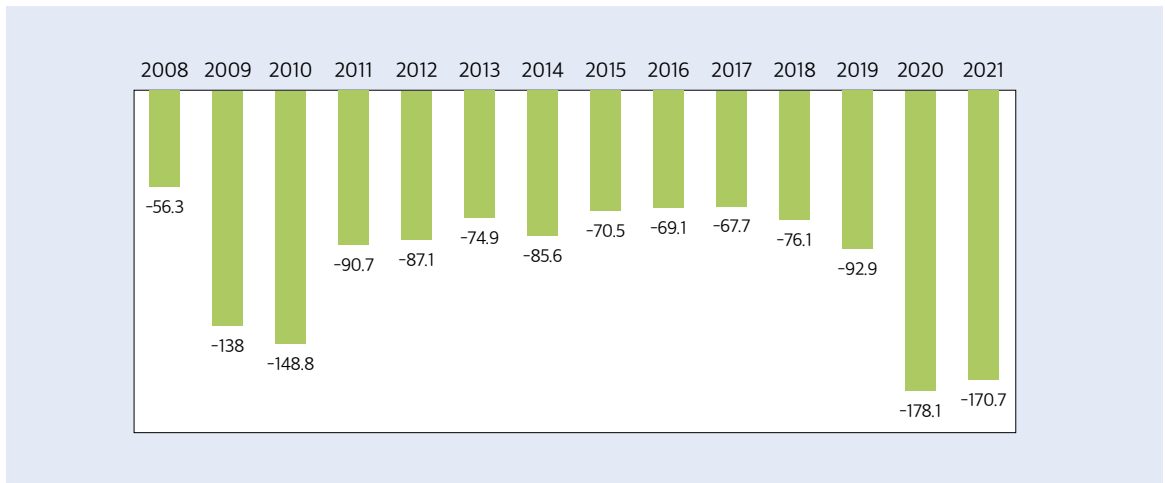
출처: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1, 2022. 7. 4.

44) 프랑스 예산국, PLR 2021-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2021, 2022. 7. 4., <https://www.budget.gouv.fr/index.php/reperes/budget/articles/le-projet-de-loi-et-de-reglement-et-dapprobation-des-comptes-de-letat-pour>, 검색일자: 2022. 8. 17.

45) 프랑스 국회, "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et d'approbation des comptes n° 13, rejeté définitivement par l'Assemblée nation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5, alinéa 4, de la Constitution," 2022. 8. 3.,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t0013_texte-adopte-seance, 검색일자: 2022. 8. 17.

[그림 6] 프랑스의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유로)



출처: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1*, 2022. 7. 4.

- 6.4%로 개선되었으며, 공공부채 역시 2020년 114.6%에서 2021년 112.5%로 하락하였는데 주로 GDP의 반등에 기인
- 그러나 높은 수준의 긴급 지원 조치와 프랑스 회복 계획으로 인해 공공재정은 악화되고 있음
- 2021년 재정지출은 비상계획 미션 및 경기부양대책에 따른 지출증가로 2020년 대비 451억 유로 증가한 4,885억유로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미션의 연장으로 344억유로 투입
- 재정지출 증가는 비상계획 미션 외에 인플레이션 수당, 수익 손실 보상 등 다양한 예외적

- 재정지원에 기인함
- 2021년 재정수입은 경제활동 재개와 법인세 수입 증가 등으로 2020년 대비 46.3억유로 증가한 3,170억유로
- 법인세 10억유로, 소득세 4.6억유로, 에너지 제품소비세 11.5억유로와 함께 국가 보증 대출로 인한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까지 증가함

[기타]

- 정부, 2022~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발표(2022. 7. 29.)⁴⁶⁾
- (경제전망)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2021년

46) 프랑스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2022. 7. 29., 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2/programme_stabilite/PSTAB%202022.pdf



6.8%로 강하게 반등한 후 2022년 2.5%까지 감소하고 2023년에는 1.4%, 2024~2027년 평균 1.7% 성장할 전망

- 코로나19 재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후 2022년 2분기부터 경제활동이 반등하고 구매력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 연말까지 가계소비가 가속화될 전망
- 2023년까지는 지정학적 상황과 공급에 대한 긴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구매력

지원 조치는 계속될 것

- 프랑스 2030,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⁴⁷⁾ 감면 등으로 공급부족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수출실적 손실 회복, 무역정상화, 완전 고용을 위한 계획 등이 실시되면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
- GDP는 2023년에 +1.4%를 기록하고 2024~2027년 기간 동안 가속화되어 2024년과 2027년 사이에 1.6%에서 1.8%로 증가할 전망

<표 4> 2021~2027년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제성장률	6.8	2.5	1.4	1.6	1.7	1.7	1.8
가계소비	5.2	2.8	1.9	1.8	1.9	1.8	1.9
일반정부소비	6.4	1.4	0.5	0.4	0.3	0.8	1.0
수입	7.8	6.5	3.0	3.5	3.5	3.1	3.4
수출	8.6	7.1	3.5	4.1	4.1	4.1	4.2
총고정자본형성	11.4	2.9	0.8	1.8	2.0	1.1	1.4
GDP디플레이터	1.3	2.3	3.2	1.7	1.6	1.6	1.6

출처: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2~2027(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표 5> 2019~2027년 프랑스 재정 전망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	-3.1	-8.9	-6.4	-5.0	-5.0	-4.6	-4.0	-3.4	-2.9
GDP대비 공공지출 비중	53.8	60.6	58.4	57.3	55.5	55.2	54.7	54.1	53.5
재정지출 증가율	2.8	6.8	4.3	3.0	1.4	2.8	2.5	2.1	2.4
총조세부담률	43.8	44.4	44.3	44.8	43.5	43.8	44.0	44.0	44.0
GDP대비 공공채무	97.4	114.6	112.5	111.9	111.7	112.8	113.3	113.2	112.5

출처: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2~2027(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47) 기업부가가치금(연간 매출액 50만유로를 달성한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기업토지세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21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참고

- 경제회복은 2024년부터 뚜렷해질 전망이며 2027년까지 가속화되어 2024~2027년에는 평균 1.7%에 도달할 전망
- (재정전망) 코로나19 및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수지 및 공공채무 비율은 공공지출 통제를 통해 개선되어 2024년부터 점차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는 2020년 -8.9%에서 2021년 -6.4%, 2022년 -5%, 2024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2027년 -3% 미만까지 감소할 전망
 - 2022년 공공채무 비율은 GDP의 111.9%까지 감소하고 부채 흐름이 제한되어 2023년 공공채무 비율은 소폭 감소한 111.7%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채무수준은 GDP의 112.5%(2조 8,131억유로)로 2020년의 114.6% 대비 약 2%p 감소함
 - 중기 성장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채무비율은 2025년까지 소폭 상승한 후 2026~2027년에는 안정화를 넘어 감소할 전망
- (재정전략) 2023~2027년의 기간 동안 정부는 재정의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함
 - 2027년까지 공공적자 3% 미만 달성과 동시에 지출의 질을 높여 완전 고용 및 성장잠재력을 지원할 예정
 -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채무를 감소시켜, 2026년부터 GDP 대비 공공채무의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짐
 - 완전 고용 달성과 활동 및 성장 잠재력 지원

을 위해 생태 및 디지털 전환의 필수 투자를 강화하고, 프랑스 2030 및 프랑스 회복계획에 따른 지출은 지속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비상계획 및 회복 관련 부문을 제외하고 0.6%로 제한하고, 세금의 의무 부과율 증가는 방지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구현

■ 통계청, 2022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2. 7. 29.)⁴⁸⁾

- 대외무역의 회복으로 프랑스의 2022년 2분기 GDP는 0.5% 성장함

<표 6>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¹⁾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1 Q3	2021 Q4	2022 Q1	2022 Q2	2021	
GDP 성장률	3.3	0.6	-0.2	0.5	6.8	
가계 소비	5.8	0.5	-1.3	-0.2	5.2	
정부 소비	3.0	0.4	0.0	-0.2	6.4	
총고정자본형성 ²⁾ (GFCF)	0.5	-0.1	0.5	0.5	11.4	
수출	2.3	2.8	1.6	0.8	8.6	
수입	1.0	4.0	1.2	-0.6	7.8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3.9	0.4	-0.5	0.0	7.0
	재고투자	-0.9	0.6	0.2	0.1	-0.3
	대외무역	0.4	-0.4	0.1	0.4	0.1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rebounded in Q2 2022(+0.5%), 2022. 7. 29.

48)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rebounded in Q2 2022(+0.5%), 2022. 7. 29.,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480956>, 검색일자: 2022. 8. 25.



- 수출증가(+0.8%)와 수입감소(-0.6%)에 따라 대외무역이 GDP 성장에 0.4% 기여함
 - 수출은 운송 서비스(+6.3%)와 관광객의 소비(+8.6%)에 힘입어 성장했으며, 석유(-9.9%) 및 기타 공산품(-1.5%)의 수입이 감소함
- 가계소비는 1분기 -1.3%, 2분기 -0.2%로 2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나, 관광업의 회복으로 프랑스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는 증가함
-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정보 및 통신, 비즈니스 분야의 주도로 증가세를 유지함(+0.5%)

■ 통계청, 2022년 2분기 실업률 발표(2022. 8. 12.)⁴⁹⁾

- 2022년 2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4%로 전 분기 대비 0.1%p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5%p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
 - 25~49세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1%p 증가한 6.7%로 안정적이었고, 50세 이상 실업률은 0.3%p 감소한 5.2%를 기록
 - 전 분기 대비 실업자는 29,000명 증가하였으나, 장기실업률은 소폭 하락함
 - 남성의 실업률이 7.5%, 여성의 실업률은 7.3%로 전년 대비 각각 0.4%p, 0.6%p 감소한 수치
 - 15~64세 고용률은 68.0%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으며, 통계청이 측정을 시작한 1975년 이래 최고 수준 기록

<표 7>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구분	2022(%)		증감(%p)		2022 Q2 실업자 수 (천명)
	Q1	Q2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3	7.4	0.1	-0.5	2,265
15~24세	16.5	17.8	1.3	-1.5	592
25~49세	6.6	6.7	0.1	-0.3	1,178
50세 이상	5.5	5.2	-0.3	-0.8	495
남자	7.4	7.5	0.1	-0.4	1,179
15~24세	17.0	18.1	1.1	-0.9	321
25~49세	6.5	6.7	0.2	-0.2	604
50세 이상	5.5	5.3	-0.2	-0.8	254
여자	7.3	7.3	0.0	-0.6	1,087
15~24세	15.9	17.5	1.6	-2.0	272
25~49세	6.7	6.6	-0.1	-0.6	574
50세 이상	5.6	5.1	-0.5	-0.7	241
장기실업률	2.2	2.1	-0.1	-0.3	638
고용률	68.0	68.0	0.0	1.0	-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22. 8. 12.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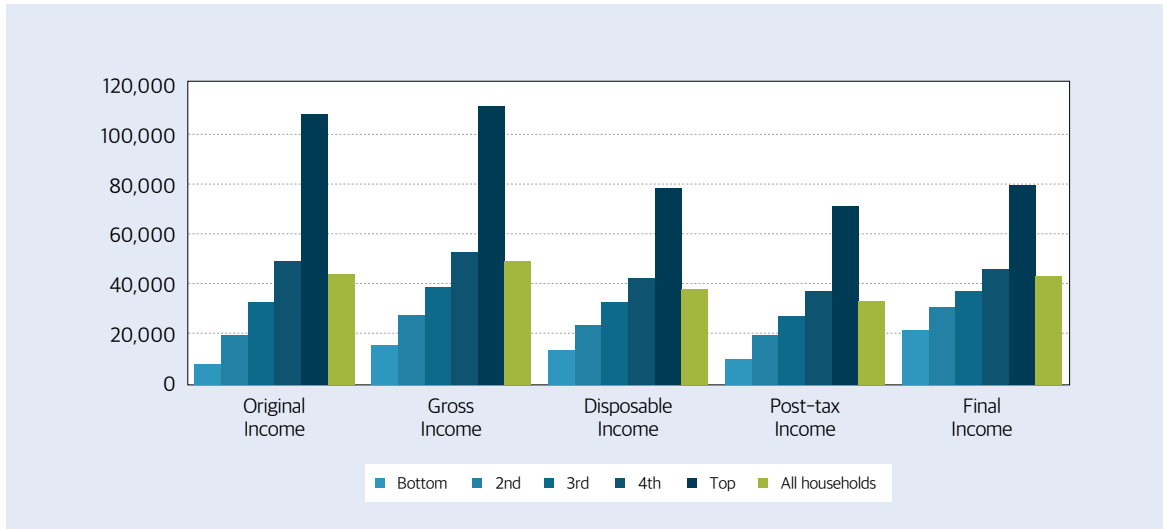
- 영국 통계청, 'FY2020-21 조세 및 재정수혜가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분석' 발표(2022. 7. 29.)⁵⁰⁾
 - 영국 통계청은 직·간접세, 현물·현금급여 등이 소득 분위별 개인 및 가계에 미치는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함
 - FY2020-21에 조세 및 현물·현금급여는 소득

49)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4%, 2022. 8. 12.,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483584>, 검색일자: 2022. 8. 26.

50) ON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2022. 7. 2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incomeandwealth/bulletins/theeffectsoftaxesandbenefitsonhouseholdincome/financialyearending2021>, 검색일자: 2022. 8. 18.

[그림 7] 소득분위별 가계소득(FY2020-21)

(단위: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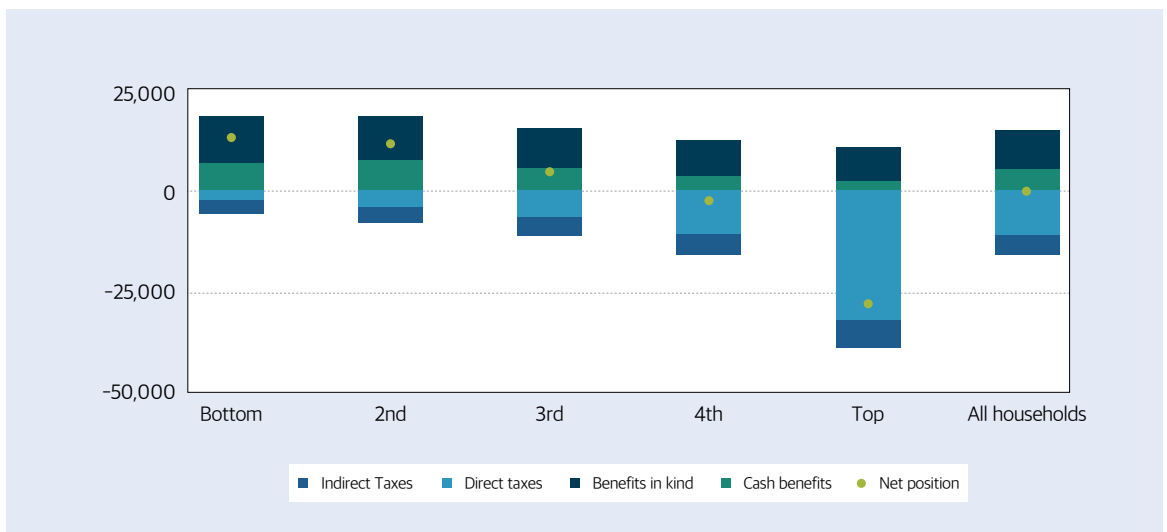


주: 유형별 소득은 ① 본원소득(Original Income: 근로, 개인연금, 투자, 기타 비정부 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② 총소득(Gross Income: 본원소득과 현금 급여를 합산), ③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 ④ 세후소득(Post Tax Income: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차감), ⑤ 최종 소득(Final Income: 세후소득에 현금급여를 합산)을 나타냄

출처: ON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2022. 7. 29., Figure 1.

[그림 8] 조세 및 재정수혜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FY2020-21)

(단위: 파운드)



출처: ON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2022. 7. 29., Figure 5.



이 더욱 균등하게 분배되는 데 기여함

- 중위 가계소득 기준,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반영 전 소득은 34,000파운드였으나 반영 후 소득은 37,600파운드로 늘어남
- 소득 상위 20%의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반영 전 평균 가계소득은 소득 하위 20%의 약 13배(각각 107,600파운드와 8,200파운드)가 넘지만,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반영 후의 평균 가계소득은 약 4배로(각각 79,200파운드와 21,400파운드) 격차가 축소됨
- 또한 FY2020-21에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반영 후 소득 기준 지니계수(30.9%→29.9%, 최종소득 기준)는 전년 대비 약 1.0%p 감소
- FY2020-21에 현금 급여(지니계수 약 9.5%p 감소)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간접세(지니계수 약 3.8%p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킴
 - FY2020-21에 가처분소득 중 간접세 지출 비중이 소득 하위 20%는 22.9%이지만 소득 상위 20%는 약 9.1%로 나타남
- 조세부담보다 재정수혜가 더 큰 개인의 비율이 FY2020-21에 54.2%로 전년 대비 약 7%p 늘어나 통계 시작(1977년) 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간접세 감소(한시적 VAT 축소, 소비 규모 감소)와 현물급여 증가(NHS의 지출 증가 등)를 반영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2022년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2022. 8. 4.)⁵¹⁾
 - (경제전망) 영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2022년 4분기부터 경기침체에 들어갈 전망
 - 가계 실질 세후 소득이 2022년과 2023년에 급감하고 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
 - CPI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9.4%에서 2022년 4분기에 1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2023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년 내에 목표치인 2%로 하락할 전망
 - 실업률은 2023년부터 상승하여 2025년 3분기에 약 6.3%를 기록할 전망
 - (기준금리 변경) 통화정책위원회(MPC)는 2022년 8월 회의(8월 3일)에서 영국의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75%로 0.5%p 인상하기로 결정
 - * 8인은 0.5%p, 1인은 0.25%p 인상 의견을 제시
 - (국채 매각) 경제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9월 회의의 확정 투표 결과에 따라 보유 국채 매각을 9월 회의 이후에 개시할 예정
 - * 2022년 8월 3일 기준, APF(Asset Purchase Facility: 자산매입제도) 보유 자산 규모는 8,630억파운드(국채 매입 8,440억파운드, 회사채 매입 191억파운드)임
 - MPC는 매각이 개시될 경우 표결 시점부터 12개월간 보유 국채 축소 규모를 800억파운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만기 국채 규모를 고려한 매각 프로그램의 규모는 분기당 약 100억파운드로 예상

51)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1.75% - August 2022," 2022. 8. 4.,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2/june-2022>, 검색일자: 2022. 8. 17.; _____, "Asset Purchase Facility: Gilt Sales - Provisional Market Notice 4 August 2022," 2022. 8. 4., <https://www.bankofengland.co.uk/markets/market-notices/2022/august/asset-purchase-facility-gilt-sales-provisional-market-notice-4-august-2022>, 검색일자: 2022. 8. 17.

<표 8> 8월 통화정책보고서의 기준선 전망

(단위: %)

구분	3분기 기준				연간 기준				
	2022 Q3	2023 Q3	2024 Q3	2025 Q3	2020	2021	2022	2023	2024
GDP 성장률	2.3	-2.1	0.0	0.4	-9.25	7.5	3.5	-1.5	-0.25
실업률	3.7	4.4	5.5	6.3	5.25	4	3.75	4.75	5.75
CPI 인플레이션	9.9	9.5	2.0	0.8	0.5	5	13	5.5	1.5

출처: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2022. 8., Table 1.A 및 Table 1.E.

<표 9> 최근 영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일시	'18. 8. 2.	'20. 3. 11.	'20. 3. 19.	'21. 12. 16.	'22. 2. 3.	'22. 3. 17.	'22. 5. 5.	'22. 6. 16.	'22. 8. 4.
금리	0.75	0.25	0.10	0.25	0.50	0.75	1.00	1.25	1.75

출처: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2. 8. 4.

재정포럼

2022년 9월호 통권 제315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성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22년 9월 15일 발행 / 제26권 제9호(통권 제31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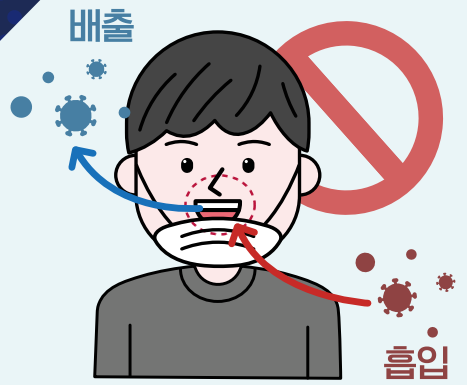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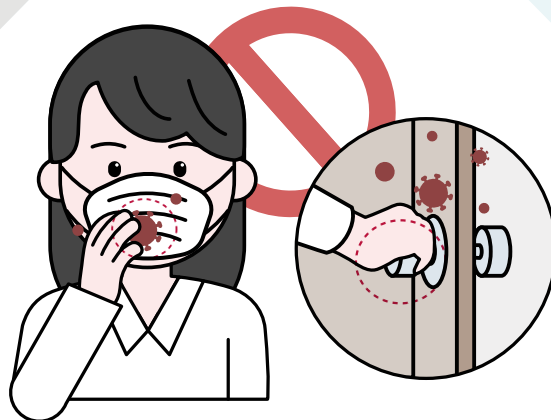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르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